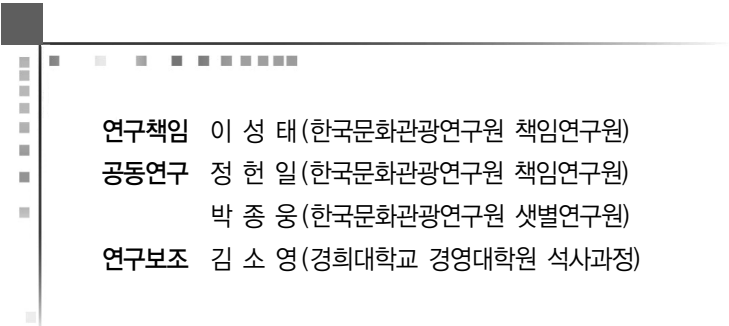


기본과제 2012-53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

이 성 태



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정 현 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중 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셋별연구원)
연구보조 김 소 영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서 문

문화와 관광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대부분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 및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집중 성장시대에 고착된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 인해 각종 금융 및 세제지원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책정받는 등 차별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문화와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고려하는 인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 조세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내수촉진 분야에 맞추어져 있다면 문화 및 관광산업에도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조세감면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기대효과, 그리고 기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한 조세감면안이므로, 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박 광 무

연구개요 ●●



1. 연구개요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 및 관광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과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임
- 경제 집중 성장시대에 고착된 제조업 위주의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편중 지원정책으로 인해 문화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문화 및 관광산업이 제조업과 비교하여 외화가득율과 경제파급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문화 및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산업의 조세감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타당성을 부각시키고, 문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동성 순환과 국가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민간소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안을 개선하고자 함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조세감면 건 의서 및 평가서 내용에 근거하여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 논리를 보완하며, 더 나아가 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건의안을 발굴함
- 둘째,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조세정책, 문화·관광분야 시장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조세감면 건의안별 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 문헌 및 통계조사

- 조세종류 및 범위, 조세납부 현황 등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내용 분석
- 기타 정부 부처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내용 분석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및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방안 분석
- 국가 경제정책 중점 추진 분야 파악
- 국회예산정책처 및 조세연구원 등 조세 전문분석기관의 조세지원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
- 문화 및 관광사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등 기초통계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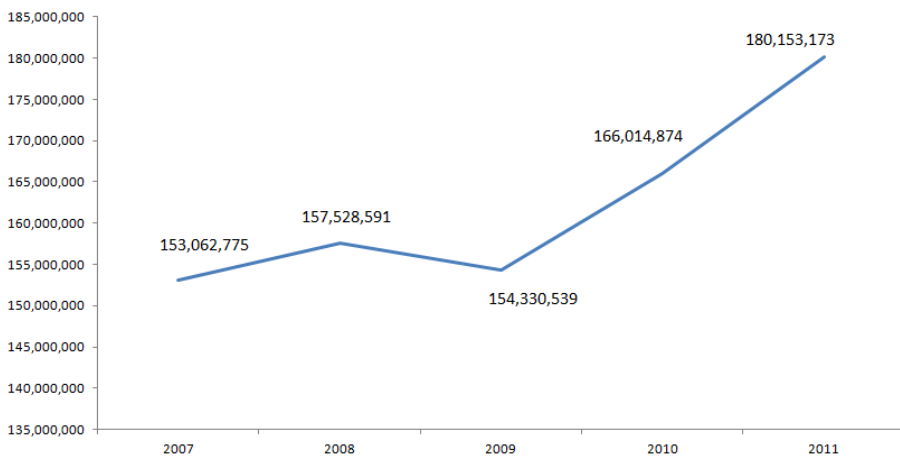
- 문화관광업계 및 협회의 조세감면 관련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파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및 관광부서 담당관의 조세감면 의견 수렴
- 정부부처 조세감면 건의안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기준 고찰
-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 건의안의 정책적 및 경제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국가 조세정책과의 부합 등에 대해 검토

2. 국가조세수입 현황 및 정책 동향

가. 국가조세수입 현황

-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성된 내국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수납액은 2011년 기준 180조 1,531억 7300만원으로 집계됨
- 총 징수결정액은 약 198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불납 결손액이 7조 2,700억 원, 미수납액이 약 1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

- 국세 수납액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이 심화된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의 조세수납액은 전년 대비 8% 증가율을 나타냄
- 반면, 조세수납 규모가 증대되는 만큼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그림 1] 국가 조세 수납액 추이

- 국가 경제규모 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 증대와 함께 고령자 및 사회취약 계층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특법 및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수입은 2009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하락하고 종합소득세 공제 규모가 상승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인지세 부과 등 신규 세수 원천이 발굴되고 특정 조세의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전체 조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나. 조세정책 동향

-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물론, 각종 국가 및 지방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국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인 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강제징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금 및 과태료나 공익목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 혹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과는 별개의 개념
 - 조세납부를 의무화하여 강제한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여하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용도는 물론 존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조세부과는 당연하지만 과세 대상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 및 생산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바,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됨
 - 예컨대 경기 침체기에 경제 활성화 촉진정책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을 시행
- 결국 국가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세수를 확보하면서 납세자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책사업 및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은 국가채무와도 관계되므로 원활한 국가운용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조세수입은 중요¹⁾
 - 한편 정부수입 확충을 위해 과세를 강화할 경우 개인 및 법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적절한 조세정책이 필요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조세감면 및 세법개정 등을 통해 각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재정건전성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각 정부부처는 매년 5월에 기획재정부에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를 제출

1) 2026년까지 국가부채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를 2010년 대비 12.25%p(OECD 평균) 개선해야 하며, 특히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관련 지출증가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국가경제상황 및 경제정책 기조 등을 반영하여 각종 세율 등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을 매년 추진
- 현 정부는 경기불황 및 저성장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간소비 활성화, 중소기업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중점을 둔 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 안

가. 조세감면 건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법에 의거하여 매년 약 20건~40건의 문화·관광·체육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및 평가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 중 관광분야는 약 10여건 내외임
 -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에 대한 조세감면 혹은 면제를 건의
-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조세건의안은 대부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 일몰기한 연장 등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투자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설 및 설비 확충과 운영비용 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된 목표

나. 조세감면 건의안

1)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 관광숙박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기한 연장(2015.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1항
- 한류 및 쇼핑관광 활성화와 신규 항공노선 공급확대 등에 의해 우리나라

관광매력도가 향상된 데 따라 인바운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광 숙박시설 부족문제는 외래객 유치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약 5,506실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숙박업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세액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경우 관광숙박업 매출액 증대와 신규 고용 증가로 인해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의 조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신규 고용도 2016년까지 20,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2) 유원시설업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개정을 통한 유원시설업 관세 경감을 확대
 - 관광 사업에 관련한 유원시설 등의 장비 수입 시 관세 경감 항목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 유원시설업의 놀이기구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률을 기타 산업과 동일한 65%~85%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립
- 유원시설업에 설치된 롤러코스터 및 자이로드롭 등 탑승기구는 최첨단 장비이므로 안전 및 기술 등의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기준 국내 유원시설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사설물은 2,506종류 4,912개인 것으로 파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관광업 간의 경감세율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관세경감항목을 정하고 65%~85%까지 경감해주고 있으나, 유원시설의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률은 8%에 불과
- 따라서 국내 관광산업 발전과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관광패러다임의 선진화와 경제성장 촉진은 물론, 제조업 등 기타 산업과의 형평

성 확립 차원에서 국내에서의 생산이 불가능한 유희시설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율을 제조업 등 기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필요가 있음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유원시설업의 매출총액은 1조 435억으로 추정되었는데, 만일 수입 유희시설에 대한 관세 경감률을 6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약 6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3) MICE 종업원할 사업소세 한시적 면제

- MICE 산업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함
 -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당해 시·군·구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종업원할 사업소세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체에 근무하는 월 통상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급여총액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업계의 신규인력 추가채용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50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국제회의업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일정기간 면세하는 경우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국제회의업체는 절감된 재원을 직원 교육비, 직원고용, R&D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제회의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 50인 이상 종사자 고용 국제회의업의 2011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1조 2,809억 원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약 64억 원 수준이며, 이를 면세할 경우 첫 해에는 약 15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관광산업부문 고용유발계수 0.0229를 적용하여 추정
 -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 직원 교육 및 R&D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회의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신규 고용된 종사자로 인한 소득세 증대의 긍정적 효과도 발생

4)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 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4호 및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1호의 개정
 - 지방세법 제277조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감면 대상에 관광사업자를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의 개정을 통해 유원시설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
- 현행 지방세법 상 관광단지 개발 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관광단지 내에 입지한 유원시설업은 부동산 및 오락시설 취득 시 취득세 납부대상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감면혜택이 없는 상황
-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내수진작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관광단지 개발 시행자는 물론 관광사업체로부터도 유발되는 바, 세제 혜택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관광 사업은 반드시 부동산을 필요로 하고, 장치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초기의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이 존재함
- 관광단지개발사업자와 관광사업체와의 조세적용 형평성 확립과 더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상 업종 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5)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

-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교육, 조리연구시설의 확충, 관광호텔 객실 개, 보수 투자 시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 제조업 등 타 업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임
-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에서 나타낸 바와 같음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우대(중소 7%, 일반 3%)
 - R&D 세액공제 우대(중소: ①, ②중 선택, 일반: ②의 40%만 적용)
 - ① 당해 연도 R&D비용×15%,
 - ② (당해 연도 R&D비용-4년 평균 R&D비용)×50%
 - 특허권 등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 우대(중소 7%, 일반 3%)
 -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과세표준의 10%(일반 15%)
-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시행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육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관광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투숙객들이 증가함으로써 매출이 증대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기준 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관광호텔이 생산성향상시설 분야에 투자한 평균 비용이 1,267백만 원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1개 업체당 평균 세수감면액은 약 8,900만 원으로 추정

4. 문화산업분야 조세감면 건의 안

가. 조세감면 건의 현황

- 2012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정책실에서 건의한 안건은 총 9개이며 기존의 세제 감면에 대한 존치 평가를 제시한 안건은 3개임

나. 조세감면 건의안

1)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과학기술분야에 인정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법제10조)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문화산업의 창작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개정
- 조세감면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에 비해 약 2배이며, OECD 실증분석에 의하면 지식서비스 투입을 1% 늘리면 부가가치가 평균 2.6~4.2%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진국들은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NIPA, 2011)
 - 문화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하나의 작품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R&D 기획·수행·활용에 있어 기존 제조업 방식과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문화와 콘텐츠라는 속성을 통해 융복합화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시너지를 제고하는 R&D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함
 - ICT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른 문화서비스 R&D 정책을 연계시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정책효과

-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기업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영화, 게임, 방송 등에서 창작이 기술개발로 인정되지 못하는 바, 문화산업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본 건의안은 초기 기획개발에 있어 물적 투자까지 세액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세수 감면은 크지 않은데 비해 이를 통해 영화, 게임,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매출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건의안의 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와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조세감면의 필요성

- 콘텐츠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및 관광 활성화 등 외부효과도 크게 창출하므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12.2만 개) 중 약 87%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체로, 가장 큰 애로요인은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
-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와 인력투입의 비중이 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낮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지원법 등의 투자의 범위에 문화콘텐츠관련 프로젝트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는 제외되어 있어 조세특례 적용의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함

- 문화콘텐츠업종의 경우 게임산업을 제외하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주식이나 출자지분과 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이 상례임
-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투자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으로 사료됨

○ 정책효과

- 정책적으로 모태펀드, 완성보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다양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 부진은 여전히 난제이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창투사의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세제 개선조치는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주어 영세한 콘텐츠 제작 및 배급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할 것임
-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화업계로부터의 세수 규모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임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건의안의 내용

- 개인투자자가 프로젝트투자를 통하여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

○ 조세감면의 필요성

- 개인출자자가 프로젝트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동 수익배분금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출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87조의5), 투융자집합투자기구(91조의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91조의6)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에 대한 제조업 등의 투자와의 업종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 영화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서 종결하는 방안을 건의

○ 정책효과

- 개인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로 개인투자자들이 콘텐츠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자극하여 전략적 투자자(SI)보다는 금융 투자자(FI)의 유입이 늘어날 것임
-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투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콘텐츠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4)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 건의안의 내용

- 공동제작영화 또는 외국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의 필요성

- 영화업계 수익률이 저조하여 투자주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부가시장 붕괴, 내수시장 한계로 영화제작사들의 규모의 경제 및 산업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영화업계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외국 영화 촬영과 후반 작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한국영화가 해외로케이션을 한 경우는 72건에 달했으나 외국영화가 한국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한 경우는 7편

에 불과함

- 로케이션 촬영유치는 영화 흥행 시 지역 홍보에 따른 관광서비스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책효과

- 로케이션 촬영유치는 영화 흥행 시 지역 홍보에 따른 관광서비스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아가 한국영화의 국외 로케이션 촬영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외화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5)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 시 제작준비금 손금 인정

○ 건의안의 내용

- 해외 수주액의 50%를 제작준비금으로 손금인정

○ 조세감면의 필요성

-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은 영화, 게임,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며, 타 산업 파급효과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 외국에서는 헐리웃 등 CG 프로젝트의 자국유치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폭적 자금, 세제지원 시행중

* 캐나다는 세제지원을 통해 인건비의 약30~60%까지 환급, 뉴질랜드는 제작비의 15%, 영국은 20~25% 환급

*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에 제작비 15% 환급으로 웨타스튜디오가 Top5로 성장하였으며 2만개 신규고용 창출, 관광객 연 5.6% 증가

- 우리나라는 해외 CG프로젝트 수주시 조세지원 제도가 없어 해외경쟁국의 세제지원 등과 비교할 때 지원 과소

* 헐리웃에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CG프로젝트를 해외에 아웃소싱

- 해외 CG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 증가, CG산업 육성으로 영상물 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정책효과

- 해외에서 수주하는 CG프로젝트는 수주금은 CG완성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투자(수주한 금액)를 받아 국내기업이 CG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이에 대한 손금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컴퓨터그래픽 제작 사업에 대하여 해외 수주금액 등에 대한 손비(경비) 인정으로 법인세 등의 직접 국세 감면혜택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컴퓨터그래픽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건의 안

가. 조세감면 건의 현황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의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건의 및 평가 목록 총 284건 중 조세감면건의 30건, 평가감면평가 28건으로 총 58건임
- 대부분 건의안이 조특법과 관련이 있음

나. 조세감면 건의 안

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 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 건의안의 내용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되는 바,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증가하는 추세

를 고려하여 동 규정 삭제

○ 조세감면의 필요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내용을 보면 공익적 역할을 추구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제한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
- 그러나, 현행법 상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공간적 제약이 있음
-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문화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문화복지의 수요, 공급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정책효과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함
- 목적사업과 연계한 수익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경우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대해 경제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보완책 필요)

2)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건의안의 내용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해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감면의 필요성

- 타 산업 영역의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제적 성격의 조세 지원이 존재함(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안전 강화 등)
- 이는 공익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경우 3%(중소기업의 경우 7%), 환경

보전 시설투자의 경우 10%, 안전시설 설비투자의 경우 3%,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의 경우 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의 경우 7%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책효과

- 민간영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가능성이 존재함
-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짐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 건의안의 내용

- 문화접대비 세제특례에 대한 일몰제 폐지
- 문화접대비의 비중 상·하한 한도(10%, 1%) 폐지

○ 조세감면의 필요성

- 불건전한 접대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예술계의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
- 문화예술재의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의 공급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음(문화예술에 대한 지출 활성화)

○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

- 2007년 문화접대비 세제특례 도입 시, 기업의 접대문화의 개선,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한시적 일몰제 시행
- 현재 일몰제는 2014년까지 연장, 적용한도가 확대됨(3%초과→1%초과)에 따라, 앞으로 문화접대비를 현재보다 ‘확대(27.0%)’하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71.0%)’하겠다는 기업이 98%로 나타남(중소기업중앙회, 2012)
-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2009년 2.8백만 원, 2010년 4.9백만

- 원, 2011년 5.3백만 원으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접대비의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함

○ 문화접대비 상한(10%) 한도의 폐지

- 문화접대비 상한 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접대비 증액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별도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전략적 관점에서 문화접대비 상한을 10%에서 30~40%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초과 한도액을 10~20%로 확대할 경우 평균 4.47%, 20~30%로 확대할 경우 7.19%, 30~40%로 확대할 경우 평균 10.59%로 문화접대비를 확대할 것으로 조사됨(중소기업중앙회, 2012)

○ 정책효과

- 유흥 중심의 기업의 접대문화를 개선, 문화예술계에 활력 제공 등의 정책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4) 소득세법상 특례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건의안의 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문화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대상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신문, 정기간행물, 간행물 및 미술품 구입 금액, 영화 및 공연 관람료, 미술관·도서관·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이용료,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등

○ 조세감면의 필요성

- 문화예술 분야 지출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 근로소득자에 대한 문화적 재투자로서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여가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책효과

-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주로 중산층 이상)
- 이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문화예술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민의 여가 생활 여건 개선
- 문화예술 관련 지출비용의 증가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도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창의력 개발 등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제1장 서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8

제2장 국가 조세수입 현황 및 조세정책 동향 분석9

제1절 국가 조세체계 및 조세수입 현황	11
1. 국가 조세체계 현황	11
2. 조세수입 현황	13
3. 시사점	25
제2절 국가 조세정책 동향 분석	27
1. 조세정책 개요	27
2. 조세정책 추진 동향	30
제3절 문화·관광 조세감면 추진 동향	48
1. 조세감면 추진 현황	48
2. 시사점	62

제3장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67

제1절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검토	69
1. 검토 개요	69
2. 조세감면 추진 방향	70
제2절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73
1.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	73
2.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82
3. MICE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89

4.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95
5.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	98
6. 소결	101

제4장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103

제1절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검토	105
1. 검토 개요	105
2. 조세감면 추진 방향	106
제2절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107
1.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7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18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124
4.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129
5.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137
6. 소결	141

제5장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방안143

제1절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방안 검토	145
1. 검토 개요	145
2. 조세감면 추진 방향	146
제2절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방안	151
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151
2.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155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159
4.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164
5. 소결	16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결론	173
제2절 정책제언	175
참고문헌	177
ABSTRACT	179
부록 : 문화관광 조세감면안 요약	181

표 차례

〈표 2-1〉 예산 및 세수 실적 현황	14
〈표 2-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5
〈표 2-3〉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16
〈표 2-4〉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17
〈표 2-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7
〈표 2-6〉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18
〈표 2-7〉 인지세 신고 현황	20
〈표 2-8〉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21
〈표 2-9〉 농어촌특별세 현황	21
〈표 2-10〉 종합부동산세율(주택)	22
〈표 2-11〉 종합부동산세율(종합합산토지)	22
〈표 2-12〉 종합부동산세율(개별합산토지)	23
〈표 2-13〉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23
〈표 2-14〉 종합소득세율	24
〈표 2-15〉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현황(2011)	25
〈표 2-16〉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현황	25
〈표 2-17〉 2008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31
〈표 2-18〉 2009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32
〈표 2-19〉 2011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33
〈표 2-20〉 2013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34
〈표 2-21〉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개정 추이	35
〈표 2-2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40
〈표 2-2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41
〈표 2-2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범위	42
〈표 2-25〉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	43
〈표 2-26〉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 요건	43
〈표 2-27〉 감면 조세 종류 및 감면 내용	44
〈표 2-28〉 혜택 대상 외국인기술자	45
〈표 2-29〉 2012년 조세법 국회 논의 결과	46
〈표 2-30〉 연도별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서	49

〈표 2-31〉 연도별 관광분야 조세감면 평가서	50
〈표 2-32〉 연도별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건의서	52
〈표 2-33〉 연도별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평가서	54
〈표 2-34〉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건의서	57
〈표 2-35〉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평가서	59
〈표 3-1〉 관광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2011)	72
〈표 3-2〉 관광숙박 수요 전망	74
〈표 3-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대출기간	75
〈표 3-4〉 관광숙박업 평균 자본금 현황(2011)	76
〈표 3-5〉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투자비 현황(2011)	77
〈표 3-6〉 관광숙박업 평균 매출액 현황(2011)	79
〈표 3-7〉 관광숙박업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건의안	81
〈표 3-8〉 유원시설업 유기시설물 현황(2011)	83
〈표 3-9〉 유원시설업 자본금 분포 현황(2011)	84
〈표 3-10〉 유원시설업 평균 시설투자비 현황(2011)	84
〈표 3-11〉 유원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현황(2011)	85
〈표 3-12〉 유원시설업 연령별 종사자수 현황(2011)	86
〈표 3-13〉 유원시설업 매출액 규모 현황(2011)	87
〈표 3-14〉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건의안	88
〈표 3-15〉 국제회의업 사업체수 현황(2011)	90
〈표 3-16〉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현황(2011)	91
〈표 3-17〉 국제회의업 연령별 종사자수 현황(2011)	91
〈표 3-18〉 국제회의업 연간 신규 인력채용 및 이직 현황(2011)	92
〈표 3-19〉 국제회의업 연간 총매출액 현황(2011)	93
〈표 3-20〉 MICE산업 종업원할 사업소세 한시적 감면	94
〈표 3-21〉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방안	95
〈표 3-22〉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97
〈표 3-23〉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투자비 현황(2011)	99
〈표 3-24〉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혜택 확대	100
〈표 3-25〉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102
〈표 4-1〉 문화산업 분야 직무별 종사자 현황	113
〈표 4-2〉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안	117

CONTENTS

〈표 4-3〉 2010년 콘텐츠기업 규모(2011 콘텐츠산업통계)	119
〈표 4-4〉 영화산업 제작편수 및 평균제작비	121
〈표 4-5〉 영화산업 향후 예상 제작편수 및 제작비용	121
〈표 4-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건의안	123
〈표 4-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건의안	128
〈표 4-8〉 부가시장 전체 매출액	130
〈표 4-9〉 10년간 외국 영상물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131
〈표 4-10〉 최근 외국 영상물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132
〈표 4-11〉 각 지역별 촬영 영상콘텐츠 유형별 평균 회차 및 회당 평균지출비용 ..	133
〈표 4-12〉 주요 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관련 예산 및 촬영 영상물의 직접 지출효과 내역	134
〈표 4-13〉 로케이션 관련 예산 대비 각 지역 촬영영상물 직접지출효과 규모 ..	134
〈표 4-14〉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안	136
〈표 4-15〉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건의안 ..	140
〈표 4-16〉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방안 제안 개요	142
〈표 5-1〉 기업의 매출액, 접대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161
〈표 5-2〉 문화접대비 확대 의향	162
〈표 5-3〉 접대비 초과 한도에 따른 문화접대비 변화	162
〈표 5-4〉 접대비 초과 한도액 확대 시 문화접대비 변화	162
〈표 5-5〉 문화향수의 걸림돌	165

그림 차례

[그림 1-1]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발굴 절차	7
[그림 2-1] 우리나라 조세 체계	12
[그림 2-2] 국가 조세 수납액 추이	13
[그림 2-3] 부가가치세 징수액 추이	18
[그림 2-4] 인지세 징수액 추이	19
[그림 2-5] 종합부동산세 징수 추이	23
[그림 2-6] 서비스업 차별 완화 방안	39
[그림 3-1] 관광호텔 객실 1개당 외래관광객 수	74
[그림 3-2] 관광업 종사자수 현황(2011)	78
[그림 3-3]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현황 및 전망	79
[그림 3-4]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	80
[그림 4-1] 연구개발(R&D)활동 비율: 업종별	110
[그림 4-2] 4대 혁신활동 유무 : 업종별	111
[그림 4-3] 4대 혁신 활동률 : 업종별	112
[그림 4-4] 콘텐츠 글로벌화 최대격전지 : 창작시스템	114
[그림 4-5] 부가시장 전체 매출액 점유율	130
[그림 4-6] 영화와 관광의 연계효과	131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문화 및 관광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조업과의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임
- 경제 집중 성장시대에 고착된 제조업 위주의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편중 지원정책으로 인해 문화 및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예컨대, 제조업은 전 업종이 조세지원 대상이지만 문화 및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등 조세 및 금융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구조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 및 관광분야 관련 협회 및 업계, 학계를 중심으로 제조업과의 비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지속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안에 대한 수용비율은 미흡함
- 문화 및 관광산업이 제조업과 비교하여 외화가득율과 경제파급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세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문화 및 관광산업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문화·관광산업의 조세감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타당성을 부각시키고, 문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유동성 순환과 국가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제시하는 등 전략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한편, 기존의 조세감면 건의안에 대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나 혹은 국가 조세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원인이므로, 중요 조세감면안의 논리 보강 및 신규 감세안의 발굴 등 조세감면 건의안건의 재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민간소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안을 개선하고자 함
-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던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내용에 근거하여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 논리를 보완하며, 더 나아가 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건의안을 발굴함
- 둘째, 국내외 경제상황, 국가조세정책, 문화관광분야 시장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해당 분야 조세감면 건의안별 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문화 및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하에 있는 문화 및 관광분야 산업의 업종에 국한함
 - 문화산업, 문화예술, 관광산업 분야

나.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업과 문화산업, 문화예술 분야의 조세감면 건의안을 검토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세감면 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기 제출한 문화 및 관광분야 감세 건의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
- 문화 및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파악과 함께 국세 수입 현황 및 조세정책 추진 동향 등을 중점 분석함
- 문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성장 정책에 일조하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세지원 건의를 파악하고 정책적 타당성 도출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함
-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인 바 감세건의는 국세에 한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세 및 부담금에 대해서도 논의함

다.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2015년을 기준으로 함
 - 2013년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에 활용될 자료 작성이 목표
 - 조세특례법상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은 2015년 12월 31일로 설정

2. 연구의 방법

- 문헌 및 통계조사
 - 조세종류 및 범위, 조세납부 현황 등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내용 분석
 - 기타 정부 부처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내용 분석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및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방안 분석
 - 국가 경제정책 중점 추진 분야 파악
 - 국회예산정책처 및 조세연구원 등 조세 전문분석기관의 조세지원 효과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
 - 문화 및 관광사업체 종사자 및 매출액 등 기초통계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 문화관광업계 및 협회의 조세감면 관련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파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및 관광부서 담당관의 조세감면 의견 수렴
 - 정부부처 조세감면 건의안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기준 고찰
 -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 건의안의 정책적 및 경제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국가 조세정책과의 부합 등에 대해 검토



[그림 1-1]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발굴 절차

제3절

기대효과

- 첫째, 문화 및 관광분야 조세감면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입법 발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둘째, 기획재정부와의 조세감면 협의 시 문화관광분야 조세지원안의 필요성과 정책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국가 경제성장 정책 기조 및 조세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문화 및 관광산업 조세감면안을 발굴함으로써, 건의안건 승인비율을 향상시키며, 문화 및 관광산업 조세지원을 통한 효과가 국가 및 지방경제 성장을 촉진함

제2장 ●●

국가 조세수입 현황 및
조세정책 동향 분석



제1절

국가 조세체계 및 조세수입 현황

1. 국가 조세체계 현황

-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는 재정운용 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 및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 및 지방세는 각각 조세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항목으로 분류됨
 - 국세는 내국세 및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분류됨. 간접세는 다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 유통세로 구분
 - 지방세는 도세 및 시군세로 구분되며, 도세는 보통세 및 목적세로 분류됨.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
 - 특정 조세에 대해 국세 혹은 지방세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원 규모 및 분포, 재정의 여건,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국세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부과 및 징수되고 있으며,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국세는 제척기간(除斥其間)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으며, 국제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²⁾
 - 국세와 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 국세에 관하여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2)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당한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

-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 소득세 혹은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지방세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음
 -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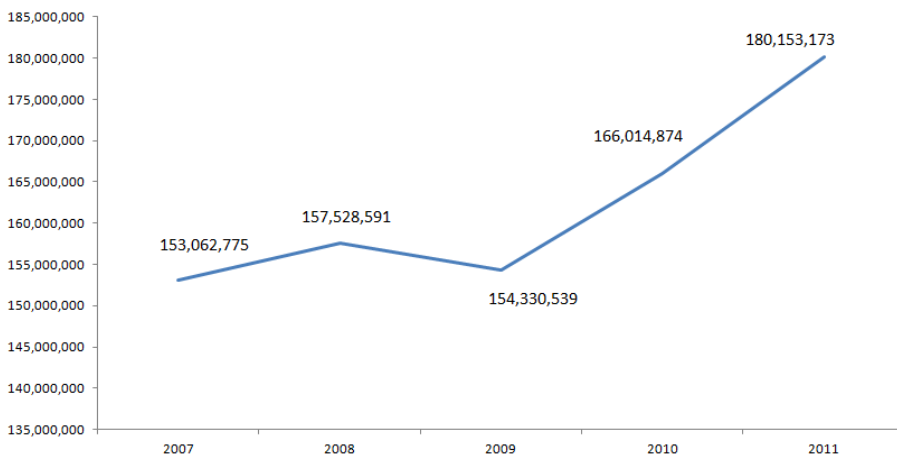


[그림 2-1] 우리나라 조세 체계

2. 조세수입 현황

가. 예산 및 세수 실적

-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성된 내국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수납액은 2011년 기준 180조 1,531억 7300만원으로 집계됨
 - 총 징수결정액은 약 198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불납 결손액이 7조 2,700억 원, 미수납액이 약 11조 5천억 원인 것으로 파악
- 국세 수납액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불황이 심화된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1년의 조세수납액은 전년 대비 8% 증가율을 나타냄
 - 반면, 조세수납 규모가 증대되는 만큼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그림 2-2] 국가 조세 수납액 추이

〈표 2-1〉 예산 및 세수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1)	징수 결정액 (2)	수납액 (3)	불납 결손액 (4)	미수납액 (5=2-3-4)	예산대비 (6=3/1)
2007	139,383,300	166,268,086	153,062,775	6,429,674	6,775,637	109.8
2008	157,320,200	174,607,308	157,528,591	6,500,206	10,578,511	100.1
2009	153,930,100	169,626,786	154,330,539	6,692,671	8,603,576	100.3
2010	160,213,600	182,178,315	166,014,874	7,186,133	8,977,308	103.6
2011	175,088,500	198,902,089	180,153,173	7,271,647	11,477,269	102.9
내국세	154,009,700	177,981,663	159,601,755	7,181,633	11,198,275	103.6
직접세	84,430,100	96,981,663	90,493,289	3,029,841	3,458,533	107.2
소득세	40,037,900	46,310,390	42,287,703	2,132,013	1,890,674	105.6
신고분	15,203,900	19,567,083	15,749,614	2,071,880	1,745,589	103.6
종합소득세	6,429,300	10,481,467	8,299,924	1,054,478	1,127,065	129.1
근로소득세	78,700	60,332	60,332	-	-	76.7
양도소득세	8,695,900	9,025,281	7,389,355	1,017,402	618,524	85.0
산림소득세	-	3	3	-	-	-
원천분	24,834,000	26,743,307	26,538,089	60,133	145,085	106.9
이자소득세	3,132,300	3,220,660	3214,398	2,999	3263	102.6
배당소득세	2,053,000	1,683,806	1681,213	395	2198	81.9
사업소득세	1,623,800	1,686,320	1651,890	7,866	26,564	101.7
근로소득세	16,419,600	18,487,133	18,337,339	43,467	106,327	111.7
기타소득세	8,555,000	914,532	908,045	2,700	3,787	106.2
연금소득세	-	2,687	2,447	221	19	-
퇴직소득세	750,300	748,169	742,757	2485	2,927	99.0
법인세	41,300,100	46,422,300	44,872,821	546,625	1,002,854	108.7
신고분	30,920,000	35,824,777	34,338,657	531,962	954,158	111.1
원천분	10,380,100	10,597,523	10,534,164	14,663	48,696	101.5
상속세	1,300,100	1,562,092	1,258,637	150,555	153,400	96.8
증여세	1,792,000	2,686,815	25,074,062	201,148	411,605	115.7
자산재평가세	-	66	66	-	-	-
간접세	64,516,900	72,128,787	64,252,132	1,658,683	6,217,972	99.6
부가가치세	52,937,300	59,358,404	51,906,874	1,636,397	5,815,133	98.1
개별소비세	5,012,400	5,813,580	5,537,255	17,290	259,035	110.5
주세	2,646,500	2,669,478	2,529,303	402	139,773	95.6
전화세	-	4	4	-	-	-
증권거래세	3,920,700	4,287,321	4,278,696	4,958	4,031	109.1
인지세	532,400	624,355	623,948	-	407	117.2
과년도수입	54,530	8,426,858	4,232,386	2,493,109	1,521,363	93.4
교통·에너지·환경세	12,366,800	11,584,166	11,545,953	19,511	18,702	93.4
방위세	-	248	231	6	11	-
교육세	4,601,800	4,323,214	4,244,527	10,485	68,202	92.2
농어촌특별세	3,042,100	3,705,392	3,658,843	10,828	35,721	120.3
종합부동산세	1,068,100	1,307,406	1,101,864	49,184	156,358	103.2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분야의 조세감면 건의가 집중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의 수입 현황에 대해서 중점 파악하였음
- 2008년~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서에 근거

나. 개별소비세 현황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칭함³⁾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 입장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구분됨
 - 개별소비세 적용 주요 물품으로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카메라·자동차·휘발유·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
- 2011년 기준 개별소비세 세액은 약 2조 4,827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2,970억 원을 공제함으로써, 최종 납부세액은 2조 4,858억 원으로 집계됨

〈표 2-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신고 인원 (1)	과세 표준 (2)	산출 세액 (3)	공제 세액 (4)	가산세 (5)	납부할 세액 (6=3-4+5)	교육세 (7)	농어촌 특별세 (8)
2007	7,778		3,018,848	307,484	366	2,711,729	586,596	52,433
2008	7,890		2,599,940	216,069	272	2,834,143	556,296	45,892
2009	8,127		2,496,899	560,914	383	1,936,368	417,431	25,499
2010	7,869		2,801,913	340,760	236	2,461,389	575,588	24,366
2011	10,967		2,782,441	297,099	474	2,485,816	600,046	58,004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사치성 품목과 더불어 오락시설장소, 유흥음식점, 골프장, 카지노 등으로 명시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타 산업에 비해 개별소비세 과세 비중이 높은

3)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세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것으로 판단됨

- 199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사치성산업으로 간주하는 정책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별소비세 감면도 난항

〈표 2-3〉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감면항목	법조문	2,858,594	3,372,846	2,875,447	3,398,143	3,670,016
수출	개소법 제15조 제1항 1호	2,532,805	2,797,275	1,947,143	2,429,506	3091,114
장애인, 환자수송 차량	개소법 제18조 제1항 제3호	156,291	67,359	41,870	212,506	173,120
외국항행 선박용 석유류	개소법 제18조 제1항 9호	115,535	96,643	210,146	192,107	143,118
군납	조특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867	3,652	917	2,401	1,388
농어업용 석유류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1호	50,178	13,461	21,847	24,451	19,825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2호	498	595	618	742	1,055
도서지방 발전용 석유류	조특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6	-	-	-	-
택시연료	조특법 제111조의 3 제1항	**	**	443,986	450,269	113,635
기타		1,414	393,861	208,920	86,161	126,761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다. 부가가치세 현황

- 부가가치세는 모든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지칭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통상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체계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차등하여 적용함

〈표 2-4〉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 10%)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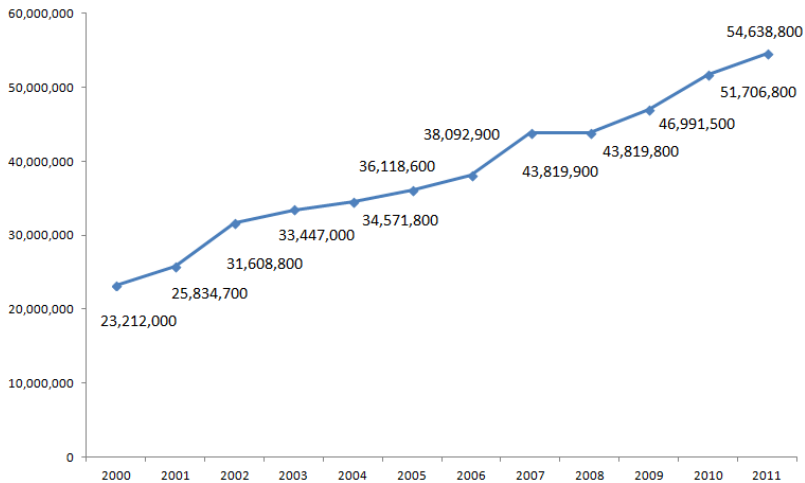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도 차등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소매업이 15%로 가장 낮으며, 운수 및 통신업이 40%로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음

〈표 2-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2010년)
소매업	15%
제조업, 전가·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1년 기준 부가가치세 총 징수액은 54조 6,388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세계금융위기 발발의 여파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매해 2,000~3,000억 원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냄
- 2003년의 부가세 징수액이 31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나, 역대 가장 높은 22%의 증가율을 기록



[그림 2-3] 부가가치세 징수액 추이

- 부가가치세는 국내분과 수입분으로 분류되는데, 국내분의 징수세액 중에는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점유비 측면에서 볼 때 수입분이 국내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들어 총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에서 수입분의 점유비가 국내분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높아지는 추세

〈표 2-6〉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합계 (1=4+5)	국내분			수입분 (5)	점유비	
		납부 (2)	환급 (3)	실세수 (4=2-3)		국내분 (6=4/1)	수입분 (7=5/1)
2000	23,212,000	20,846,000	13,397,600	7,448,400	15,763,600	41.0	67.9
2001	25,834,700	23,690,600	13,997,900	9,692,700	16,142,000	32.1	62.5
2002	31,608,800	28,854,200	14,259,700	14,594,500	17,014,300	37.5	53.8
2003	33,447,000	31,453,900	16,766,100	14,687,800	18,759,200	46.2	56.1
2004	34,571,800	33,933,300	21,834,900	12,098,400	22,473,400	43.9	65.0
2005	36,118,600	35,570,600	23,059,900	12,510,700	23,607,900	34.6	65.4
2006	38,092,900	38,148,500	26,334,600	11,813,900	26,279,000	31.0	69.0
2007	43,819,900	41,290,200	29,000,000	12,290,200	28,651,700	30.0	70.0
2008	43,819,800	43,616,500	38,376,700	5,239,800	38,580,000	12.0	88.0
2009	46,991,500	48,012,900	35,385,500	12,627,600	34,363,900	26.9	73.1
2010	51,706,800	50,725,400	41,438,800	9,286,600	42,420,200	18.0	82.0
2011	54,638,800	54,609,500	50,446,300	4,136,200	50,475,600	7.6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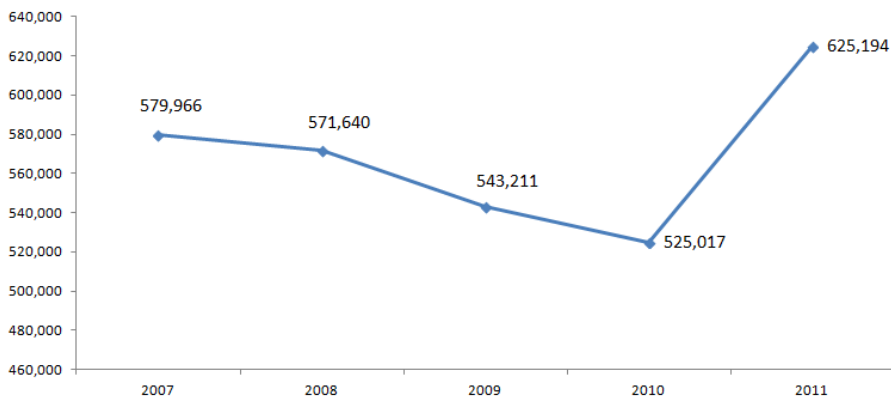
주: 1) 과세기간에 따른 신고액이 아니며, 각 회계연도에 징수 및 환급된 세액임

2) 2010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라. 인지세 현황

-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 마다, 통장 및 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지칭함
 - 광의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의미
 - 협의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및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한 과세를 의미
- 인지세를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 인지세 징수액은 근래 들어 매년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1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그림 2-4] 인지세 징수액 추이

- 지역별 인지세 납부세액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1,855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경기(148억 원), 부산(67억 7천 만원), 대구(57억 1천만 원) 순으로 나타나, 지역의 경제규모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지세 납부액이 4억 6,100만원으로 추산되어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

〈표 2-7〉 인지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신고건수	과세문서 통수	산출세액	환급세액	납부할세액
2007	2,659	267,440,146	166,251	22	579,966
2008	2,602	285,734,636	166,222	13	571,640
2009	2,621	291,343,538	169,457	14	543,211
2010	2,721	305,065,138	170,328	24	525,017
2011	341,987	269,962,151	229,812	55	625,194

주: 2011년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포함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마.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현황

-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적 성격을 보유했
-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자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는 자, 고가소비재 또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의거하여 납세의무자를 규정

〈표 2-8〉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업종	세율	비고
조세감면액 -내국세감면 -관세감면 -지방세감면	20%	조특법·지방세법·관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 부과(농어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저축감면	10%	농협수협신탁 등 출자금의 배당금, 근로자 우대저축 등의 이자에 대한 감면은 제외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만 과세
취득세액	10%	부동산 등의 취득자(서민, 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종합부동산세 납무할세액	20%	
레저세액	20%	
개별소비세액	10%(골프장30%)	고급가수, 모피, 향수, 오락기 등 사치성 물품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농어촌특별세 징수세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조 8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 3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신고세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조사

〈표 2-9〉 농어촌특별세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세액	신고세액	고지세액
2007	2,819,498	3,010,005	42,456
2008	2,757,180	2,443,562	408,777
2009	2,803,221	2,617,752	239,360
2010	2,866,582	2,758,462	228,915
2011	3,658,843	3,412,502	261,759

주: 징수세액은 해당연도에 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신고세액 및 고지세액은 각각 해당연도 귀속 신고분으로 신고납부할 세액과 해당연도에 결정되어 고지된 세액을 지칭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바.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도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이 됨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을 지칭)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지칭)
 - 다만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가 전년도에 부과된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세부담의 상한을 설정
- 종합부동산세율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각각 차등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다시 종합합산 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있음

〈표 2-10〉 종합부동산세율(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0	450만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표 2-11〉 종합부동산세율(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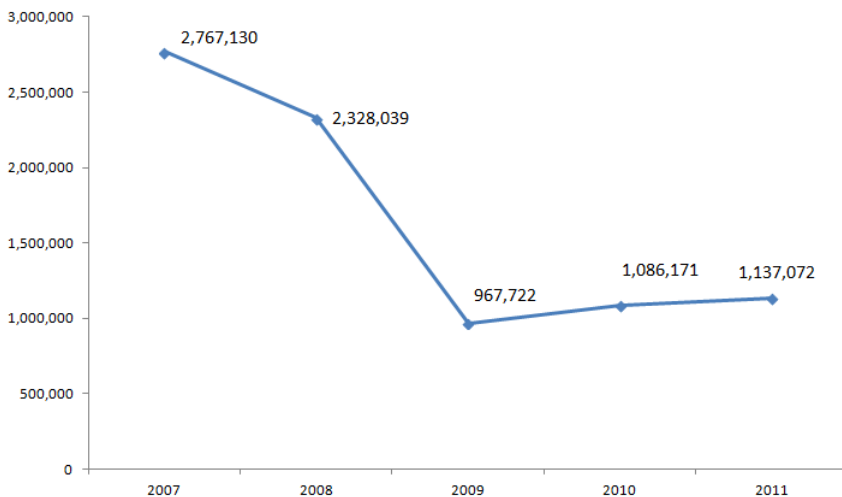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표 2-12〉 종합부동산세율(개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0.5	-
15억원 초과~45억원 이하	0.6	2,000만원
45억원 초과	0.7	6,000만원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결정금액은 1조 1,370억 원인데, 근래 들어 종합부동산 납부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개인 및 법인 공히 지속적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



[그림 2-5] 종합부동산세 징수 추이

〈표 2-13〉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007	482,622	2,767,130	468,529	1,573,116	14,093	1,194,014
2008	412,543	2,328,039	398,382	1,093,880	14,161	1,234,159
2009	212,618	967,722	202,269	318,484	9,989	649,238
2010	250,214	1,086,171	239,626	360,676	10,588	725,495
2011	248,477	1,137,072	237,470	354,367	11,007	782,705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사.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됨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신실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도록 규정
 - 다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중 분리과세로 분류된 소득은 제외
 - 거주자별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이자 소득,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⁴⁾
- 종합소득세는 <표 2-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을 차등하여 설정하고 있음

〈표 2-14〉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2012년 귀속)
1.2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천만 원 초과~4.6천만 원 이하	72만원+1.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천만원 초과~8.8천만원 이하	582만원+4.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천만 원 초과	1,590만원+8.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11년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한 총수입금액은 약 826조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총결정세액은 3조 985억 원으로 추정됨
 - 종합소득세액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소득세법상 공제, 조특법상 공제 등이 적용되어 실제 총결정세액은 하향 조정

4)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의미함

〈표 2-15〉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현황(2011)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1년 종합소득세	
	인원	금액
총수입금액	3,956,702	826,428,055
과세표준	3,170,112	3,170,112
총결정세액	3,098,548	3,098,548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 특별 지방이전 중소기업 등의 항목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매해 감면 폭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경우 개체 수는 감소하였으나 세액감면액은 증대

〈표 2-16〉 중소기업 종합소득세 감면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세액감면									
	소계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특별		지방이전 중소기업감면		기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7	600,139	427,052	3,742	19,119	585,232	395,391	476	9,724	257	2,818
2008	636,674	465,740	3,000	17,160	625,404	434,118	550	9,862	327	4,600
2009	607,674	455,592	2,990	12,734	599,120	427,115	509	11,659	301	4,084
2010	650,898	528,249	3,660	16,529	641,154	492,925	532	13,685	347	5,110
2011	687,628	701,982	5,563	28,375	677,200	649,429	206	18,036	349	6,142

자료: 국세청, 「2012년 국세통계연보」

3. 시사점

- 국가 경제규모 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 증대와 함께 고령자 및 사회취약 계층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특법 및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세수입은 2009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하락하고 종합소득세 공제 규모가 상승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인지세 부과 등 신규 세수 원천이 발굴되고 특정 조세의 감면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전체 조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가 복지사업이 확대 추진되어 정부지출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조세당국은 과세 항목 및 비율 조정을 통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제2절

국가 조세정책 동향 분석

1. 조세정책 개요

가. 조세정책 추진 방향

-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물론, 각종 국가 및 지방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국방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인 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강제징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금 및 과태료나 공익목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 혹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과는 별개의 개념
 - 조세납부를 의무화하여 강제한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여하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용도는 물론 존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조세부과는 당연하지만 과세 대상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 및 생산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바,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정책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세정책을 시행하게 됨
 - 예컨대 경기 침체에 경제 활성화 촉진정책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을 시행
-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세계 각국에 대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및 조세정책을 권고함⁵⁾

5) IMF Fiscal Monitor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나,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여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OECD Outlook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10~2014)에 따라 상당한 재정건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함

- 지출구조개혁, 연금개혁(은퇴연령 상향 조정, 혜택수급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장기 재정압력을 감소시키고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향상
 - 세율인상보다는 과세기반 확충 및 조세체계 왜곡 제거를 통한 조세지출 제한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한 정책
 - 세제개편 시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하여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결국 국가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세수를 확보하면서 납세자 소비 및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책사업 및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은 국가채무와도 관계되므로 원활한 국가운용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조세수입은 중요⁶⁾
 - 한편 정부수입 확충을 위해 과세를 강화할 경우 개인 및 법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적절한 조세정책이 필요

나. 조세정책 유형

1) 조세감면

- 정부는 경기부양 및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특정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조세의 면제나 혹은 과세비율을 인하하는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함
- 조세감면 방법으로는 비과세, 면세, 영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예컨대,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등 지급을 시행
 - 납세대상자에게 조세는 일종의 비용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

6) 2026년까지 국가부채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를 2010년 대비 12.25%p(OECD 평균) 개선해야 하며, 특히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관련 지출증가를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상황임

세면제 혹은 감면은 금융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유발

- 한편 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 소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조세 특례법에 의거, 매년 5월에 각 정부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안 및 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심사를 통해 조세감면 승인을 결정함⁷⁾
 - 조세특례제한법 142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 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2) 세법개정

- 기획재정부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정책을 시행한다는 취지에서 조정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을 작성한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개정함
 - 일반적으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된 조세감면 건의안 중 기획재정부가 수용한 안건과 경제현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중심으로 추진
-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건은 고용창출지원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동시에 재정건전성 제고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됨
 - 고용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과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및 근로자·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조세감면을 추진하지만, 한

7) 매년 정부부처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조세감면건의안은 약 150여건이나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로 인해, 실제 채택되는 조세감면안은 2~3건에 불과한 실정임

편으로 세원투명성 제고와 기존의 비과세·감면항목을 재정비

2. 조세정책 추진 동향

가. 주요 조세정책 현황

1) 세제개편

- 2008년에 단행된 세제개편에서는 양호한 재정개선 추세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경제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집중함
 - 다양한 조세방안 중 상징적인 효과가 큰 세율인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
- 2008년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세부담 인하 방안으로 소득세율 인하, 교육비 및 의료비 등 공제확대, 유가환급금 지급 등으로 요약됨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 형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연결납세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사업자 과세단위 확대, 문화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 R&D 지원확충을 위해서 R&D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
 -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감면 요건 강화, 과세범위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세대 다주택자 증과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의 종합소득세제와 일치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표 2-17〉 2008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구분	수시개편	정기개편(2월)
소득세	-유가환급금 지급	-소득세율 인하(2단계에 걸쳐 2%p) -기본공제 인상 및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ETTC 지급금액 인상 및 수급요건 완화
법인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세율 인하(2단계에 걸쳐 3~5%p)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문화산업 R&D 세액공제, 접대비 손비 일몰연장 -R&D시설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소비세	-지방화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감면,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확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 과세범위 조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동결 및 보유세 상한 하향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자료: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재인용

- 2009년에 단행된 세제개편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감세정책보다는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세제개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등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등을 통해 과세기반 확충에도 노력
 - 악화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정책목적별로 세분화된 조세지원 및 납세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

〈표 2-18〉 2009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구분	수시개편	정기개편
소득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예 -저소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3주택 이상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법인세		-지정기부금 대상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신성장산업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 공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소비세	-노후승용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인하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기타		-사업자 등록절차 간소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 확대 등

자료: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재인용

○ 2012년에 단행된 조세제도 개선에서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된 저성장·청년실업의 해소 및 경기활성화 촉진을 위해 고용창출 지원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 집중함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녹색성장 시설,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 중소벤처기업 세제지원 확대⁸⁾
-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 등 소비·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등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한편 2012년 세제개편에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

8)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부담경감변수인 자본단위당 조세보조금, 조세혜택비율, 유효세율 등은 기업의 성장성, 활동성, 수익성, 투자효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를 통한 조세지원은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및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추진함

〈표 2-19〉 2011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구분	수시개편	정기개편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산업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 공제 기한 연장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 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세제지원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외국군인의 유희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단계적 정비 -조세허위신고 및 체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금융거래 부문에 대한 합리적 과세 등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2012), 「2012년 세법개정안」

〈표 2-20〉 2013년 주요 세제개편 내용

구분	수시개편	정기개편
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 소득 범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 특례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선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조정 및 한도 확대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법인 발행 증권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명확화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 발급 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의 변경
소비세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타	-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예금이자소득 감면 3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최저한 세율을 14%~16%로 조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제외 -저소득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법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소득세 및 법인세율 개정

-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인하는 세부담 증가속도의 완화와 조세경쟁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한 것임

〈표 2-21〉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개정 추이

구분	세율
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법인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하향 조정함
 -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2008년 이전의 경우 10%에서 2008년~2009년 귀속분에 대해서 8%, 2010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 7%로 단계적 인하
- 한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함
 -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서만 7%를 적용하였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하여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 10%를 적용하도록 확대⁹⁾
 -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에 대하여 추가적 세액 공제를 허용
 -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적용

9) 2009년 세제개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제도는 폐지되었고, 지방투자에 대해서만 7%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3) 연결납세제도 도입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조직의 선택(사업부제와 분사화)에 따라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연결 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이연함으로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하여,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방식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존의 개별납세 방식과 연결납세방식 중에서 선택가능함
 - 연결납세제도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일본 등 21개국에서 운용

4) 유가환급금 지급

- 유가환급금 제도는 2008년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 조세지원 정책임
 - 2008년 동안 근로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로써, 2007년 기간 소득이 근로자의 경우 3,600만원, 종합소득자의 경우 2,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환급 대상
 - 소득수준에 따라 6만원~24만원의 환급금을 차등 지급

5) 재산세 부담 완화

- 과도한 세부담의 증가로 납세자의 불만 및 조세저항이 상승하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함
 -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의 정책방향은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통해 추진하며,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므로 지방세목으로 운영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소급 적용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단위를 변경함과 동시에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과세구간 및 세율, 그리고 과세기준 금액 등을 조정함
- 시장의 변화를 과세표준에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를 감안하여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세표준 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

6) 목적세 정비

- 정부는 2008년 9월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목적세를 개별소비세와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함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기존대로 유지
-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경우 조세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예산배분에 있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계 당국은 기타 분야의 조정을 통해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
 - 목적세 폐지로 인해 내국세가 증가하게 되므로, 국세 및 지방세간 재정 중립 유지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조정
 - 지방제정 교부금은 일반회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목적세는 일반회계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개별소비세 등과 같은 본세는 포함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통합을 전제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을 개정함

7) 서비스업 차별 완화를 위한 조세지원

(1) 개요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세제, 재정, 인력, 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제조업에 집중된 지원정책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임
-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차별완화를 위하여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 마련 시 「서비스업 차별개선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 제조업은 전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외투지역 조세감면 대상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만 대상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핵심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추진함



[그림 2-6] 서비스업 차별 완화 방안

(2) 세제지원 내용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중 조특법상 규정된 업종에 한해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제조업은 전 업종이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경우 조특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해서만 지원함
-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출판업 등이 감면 대상이며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5%~30%의 차등 감면

〈표 2-2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구 분	업 종
도소매업 등 (조특법 제7조①의1)	도매 및 소매, 의료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지식기반산업 (조특법 시행6조③)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10.2월 개정)
기타업종 (조특법제7조①의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물류사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관광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영상·오디오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함
- 우선적으로 타산업의 기술유출 방지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감면 대상(지식기반산업)에 추가 추진¹⁰⁾

10)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9.30이인데 비해 보안서비스업은 23.30이며 서비스업은 17.4로 추정됨.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제조업은 0.590이나, 보안서비스업은 0.895이고 서비스업은 0.826 수준임

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시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농축산, 어업, 광업, 제조업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함
 - 투자금액의 5~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12년 세법개정안 기준)

〈표 2-2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1) (고용감소시축소)	2%	3%	4%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7%

1)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기준금액(일반근로자 1,000만원, 청년근로자 1,500만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 2,000만원)

-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아웃소싱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9개 서비스업종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2012 세법개정안, 기재부, '12. 4/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경바·경호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③ 연구인력개발비 손금산입

- 기업의 발생수익에 대해 향후 발생할 연구인력개발 자금을 사전에 적립

할 경우, 과세연도 수입금액 3% 범위 내의 손금산입 혜택을 줌으로써 경
기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기존 제조업·건설업 등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식기반서비스 분
야 기업부설연구소로 확대
-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소프트웨어, 공학서비스, 정보서비스를 제외한 여
타 업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미미한 수준

〈표 2-24〉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범위

업종(총11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지정업체수 (2011년 말)
소매	4711, 4731, 4781, 4791	0
정보서비스	6311 ~ 6399	273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7140, 7153	4
건축공학 관련서비스	7211	895
기타공학 관련서비스	7212 ~ 7292	
기타 사업서비스	7310 ~ 7410, 7430, 7521 ~ 7599	0
위생서비스(산업)	3701 ~ 3900	0
소프트웨어개발공급	5821 ~ 5822, 6201 ~ 6209	3,764
의료 및 보건(산업)	8610 ~ 8690	7
교육기관(산업)	8550, 8561 ~ 8569, 8570	3
문화서비스(기타)	9021 ~ 9029	69

-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경쟁하여야할 유망분야로서 향후 서비스 R&D 활동
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손
금산입 대상을 확대함

- 현재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손금산입 확대 대상 업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추진

④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현행 조특법 하에서는 R&D 세액공제 대상비용의 범위를 기업부설연구
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와 동일하게 자체연구
개발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불인정

-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음
 - 즉,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보유기술의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인정

⑤ 외국인투자 조세특례

-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개발수준이 낮거나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업종, 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등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¹¹⁾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의 특례요건 대상업종에 투자하는 경우(개별형)
 -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의 주요내용은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감면

〈표 2-25〉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

구분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 대상	전자정보전기, 정밀기계신공정 등 총 9개 분야 119개 항목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전문디자인업 등 총 11개 분야 48개 항목

〈표 2-26〉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 요건

대상 업종	요건
제조업	외국인투자 3천만불 이상
관광업	외국인투자 2천만불 이상
물류업, SOC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R&D	외국인투자 2백만불 이상
공동사업의 경우	20이상의 외국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

11)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업종

〈표 2-27〉 감면 조세 종류 및 감면 내용

조세	지원 내용
법인·소득세(7년형)	5년간 감면대상세액 ¹⁾ 의 100%, 이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
법인·소득세(5년형)	3년간 감면대상세액 ¹⁾ 의 100%, 이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
외국투자자의 주식 등의 배당금의 법인·소득세	5년간 감면대상세액 ¹⁾ 의 100%, 이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
취득세·재산세	5년간 감면대상세액 ²⁾ 의 100%, 이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

주: 1) 법인세·소득세 상당액×외국인투자비율

2)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또는 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정부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아웃소싱 활성화, 외투촉진 등을 위해 첨단 외국기술 도입 수요와 국내기술 발달정도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지원서비스업’ 범위를 조정함
 -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컴퓨팅기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운영기술, Big-Data 처리기술), 교육·의료업(이러닝, 원격진료기술) 광고업, 콜센터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과 같이 지원이 필요한 첨단기술과 신규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산업지원효과가 비교적 높은 서비스업종을 신규로 추가

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 현행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 대상이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년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 면제

〈표 2-28〉 혜택 대상 외국인기술자

조특법 제16조 ④호 특정 경력 및 학위소지 분야

- 기계공업 등의 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기계공업	·정밀화학	·석유화학 및 정제업
·전기공업	·생물산업	·전자공업(전자기기, 전자부품)
·항공공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방위산업	·신소재산업(신금속재료제조업, 정밀요업, 고기능성고분자재료)	

- 사업지원서비스업 육성과 아웃소싱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7개 서비스업종에 한해 인정되는 ‘특정 경력 및 학위 소지 분야’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
-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확대를 위한 필수 인력인 ‘의료코디네이터’ 도입을 위해 ‘의료업(의료코디네이터에 한함)’을 추가함

나. 최근 조세정책 특징

-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의 심각한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지출과 세수의 수준을 적절히 조율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은 해당 정권의 국정기조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향
-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물론, 근래 들어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복지증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세수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새 정부는 모든 비과세 일몰 연장을 원칙적으로는 불허할 방침을 천명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증대한다는 계획을 수립
 -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세관련 연구원 및 학계에서 제기되어 사회적 쟁점으로 발전

- 그러나 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비 및 생산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세를 통한 조세지원과 비과세감면안 정비를 통한 세원 확충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세수확대는 거시적으로는 단순한 증세이지만, 미시적으로는 어떤 세목을 조정하는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게 상이해질 수 있음
- 현 정부는 경기불황 및 저성장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간소비 활성화, 중소기업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중점을 둔 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용된 정부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안이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기각되거나 세율이 조정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개별소비세 감면안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수용되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에서 내수경기진작 효과 미흡¹²⁾ 및 서민지원정책과의 배치를 이유로 기각¹³⁾

〈표 2-29〉 2012년 조세법 국회 논의 결과

정부안	구분	국회안
14%-15%	대기업 최저한 세율	14%-16%
기본공제 1%p 축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3년 연장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	환경오염업종배제
면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기
없음	저소득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월정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2,000만원 →월정액 150만원, 총급여 2,500만원
종료	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및 예금이자소득 감면	두 안건 공히 3년 연장
종료	산림개발소득세액 감면	3년 연장
10년	비과세제형저축 가입기간	7년
BTL방식 신축 시 부가세 3년 면제	사립대 민자 기숙사 신축지원	폐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보
선물 0.001%, 옵션 0.01%	파생상품 거래세	유보

12)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3년도 조세제출예산서 분석」

13)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39건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 7건, 재논의 결정 60건, 계류 4건, 폐기 8건으로 결정되었으며, 57건만 원안대로 합의 처리

- 한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과세표준 조정, 과세기반 확충, 세원투명성 확보 등의 세수확충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조세지원을 위한 감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거나 감면안 연장 중단 혹은 세율인상 방안을 사용
- 향후 정부의 대국민 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이므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인상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
- 경제 집중성장 시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고착화된 영향으로 인해 현행 정부의 감세 등 조세지원 혜택 역시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간 혹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인 조세지원 형평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2008년부터 5년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 혜택의 90% 이상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

제3절

문화·관광 조세감면 추진 동향

1. 조세감면 추진 현황

가. 관광산업 분야

1) 조세감면 건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30~40건의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 중 관광분야는 약 10여건 내외를 차지함
 -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에 대한 조세 일부 감면 혹은 면세를 건의
-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조세건의안은 대부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 일몰기한 연장 등에 집중되고 있음
 - 관광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시설 및 설비 등 인프라 확충과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조세감면 건의의 주된 취지
- 관광숙박업과 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으며, 여행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역시 2008년부터 4년 연속하여 건의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 조세감면안에 대해 4~5년 연속하여 건의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표 2-30〉 연도별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서

구분	내용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건의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법 제5조) - 휴양업, 유원시설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법 제5조) - 관광숙박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법 제5조) - 여행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휴양업, 유원시설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관광숙박업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_휴양업,유원시설업등(조특법제7조) 12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_관광숙박업(조특법 제7조)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_휴양업, 유원시설업 등(조특법 제26조)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_관광숙박업(조특법 제26조)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26조)_관광숙박업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26조)_휴양업, 유원시설업			○		
	공연예술 관광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의 유흥음식행위 특소세 면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2008~2012)

〈표 2-31〉 연도별 관광분야 조세감면 평가서

구분	내용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평가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 휴양업, 유원시설업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 관광숙박업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5조) - 여행업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휴양업, 유원시설업	○	○	○	○	○
	창업중소기업등에 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관광숙박업	○	○	○	○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_여행업 (조특법 제5조)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휴양업, 유원시설업 등(조특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관광숙박업(조특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_여행업(조특법 제7조)		○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_휴양업, 유원시설업 등(조특법 제26조)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_관광숙박업(조특법 제26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속 존치_관광숙박업			○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속 존치_휴양업, 유원시설업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제121조)			○	○	○
	외국인 관광숙박업 유흥음식행위 개소세 면제(개소법 제19조의3)			○	○	○
	관관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2008~2012)

2) 관광분야 조세감면안의 특징

- 관광숙박업, 여행업, 휴양업, 유원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업은 카지노업을 제외하고 전체 업종 공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일몰기한 연장 등을 건의함
 - 세부 감세항목은 문화 및 체육 등과 동일하세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집중
-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는 관광시장 환경 및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제조업과의 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관광산업 조세감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예컨대 관광산업의 외화획득률이 제조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에 대한 세율 차별이 상존하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관광업에 대한 세율인하를 요청
-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이 수용되어 실질적 감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건 개선과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물론 민간소비활성화와 고용 증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조세지원을 통해 초기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경우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만, 관광업의 조세감면 건의안의 경우 전체 업종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조특법에 대한 감면을 요구함으로써, 조세감면 건의안의 정책적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등 추진 방법상의 한계를 노출함

나. 문화산업 분야

1) 조세감면 건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 약 40건의 문화·관광·체육 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및 평가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이 중 문화산업분야는 약 20건 내외임
 - 주로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업 및 배급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콘텐츠산업 일반에 해당하는 조세 감면안도 건의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조세건의안은 대부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 일몰기한 연장 등임
 - 투자 활성화를 통한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업의 설비 확충과 운영비용 절감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된 목표
- 매년 건의하고 있는 내용은 대상 세제 항목은 바뀌고 있으나 주로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업 및 배급업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5년간 연속하여 동일한 업종의 조세감면안을 건의한 것은 해당 분야의 조세감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황

〈표 2-32〉 연도별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건의서

내용	분야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내용	분야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청징수특례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영화제작투자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문화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액 공제	문화산업 일반	○	○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 비금 손금인정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면허세 면제	문화산업 일반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 작 및 배급업		○			
공동제작영화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영상오디오 기록물제 작 및 배급업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영상오디오 기록물제 작 및 배급업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범위 확대	영상오디오 기록물제 작 및 배급업		○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 범위 확대	영상오디오 기록물제 작 및 배급업			○		○
콘텐츠기술의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제 지원	문화산업 일반			○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법인 세액공제	문화산업 일반			○		
콘텐츠 거래사실 수행기관 및 콘텐츠사업자 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산업 일반			○		
창작전문인력 인건비 지출 세액공제	문화산업 일반			○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 및 사업자에 대 한 과세특례	문화산업 일반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자산범위 확대	문화산업 일반					○
문화산업 법인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산업 일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2008~2012)

〈표 2-33〉 연도별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평가서

내용	분야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문화산업전문회사 투자법인 세액공제	문화산업 일반				○	
컴퓨터그래픽 제작투자비 손금인정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2008~2012)

2) 문화산업분야 조세감면안의 특징

- 최근 문화부의 세제 개선 건의사항은 대체로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 내의 일몰기한 연장이 우선적인 관건 대상임¹⁴⁾
 - 대체로 보아 일몰기한의 연장 건은 조세 당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같은 일몰기한 연장 건은 작년에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로 조세특례의 기한이 연장 되었음
- 그러나 문화산업과 관련된 조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창업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지원책의 개별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14) 외부전문가들은 연장 건과 신규 제언 건을 구분해서 연장 건을 먼저 배치하여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신규 건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창작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인정 등 제조업에서 인정되는 세제 지원이 콘텐츠 산업분야에 확대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분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건의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건의, 영화제작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문화산업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세액공제 건의,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에 대한 손비인정 건의, 문화산업 SPC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건의 등이 있음
 - 일몰기한 연장 건 외의 내용은 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세제 개선시 반영해 달라는 요구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난색을 표한 바 있음
- 문화콘텐츠 업종의 특징은 지분투자가 드물고 주로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사업용 자산이라 할 만한 것보다는 주로 인적자산에 투자의 결과물이 무형자산 형태로 남기 때문에 제조업 등에 수반되는 물적 자산이나 지분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제 개선 요구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음
-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구, 영화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문화부 차원에서는 지분투자로 귀결되지 않거나 유형자산 형태로 남지 않는 콘텐츠산업의 투자가 인적자원의 숙련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할 때 발현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 건 외에 콘텐츠 업계에서 요구하는 업종의 인정이나 신규 조항의 삽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조세 당국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제 감면 시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장기에 걸쳐 효과

가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리를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할 것임

-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영화제작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프로젝트 투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 업종에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세제 개선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는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영화제작 투자의 경우 해외(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사례가 있고 세금 감면으로 인한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의 경우, 지역개발의 정도가 현저히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지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로 그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 업종이 가장 큰 수요지인 수도권에 위치하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세제 감면이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로 클러스터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세제 개선 요구의 실익이 낮은 것으로 평가
- 로케이션 촬영유치의 경우에는 단순한 촬영 유치를 넘어 인력 이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는 외화유입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세금 감면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세제 당국의 반응은 미온적인 상황

다. 문화예술 분야

1) 조세감면 건의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의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건의 및 평가 목록 총 284건 중 조세감면건의 30건, 조세감면평가 28건으로 총 58건임
 - 대부분 건의안이 조특법과 관련이 있음
- 주된 건의 안건은 문화예술관련 조세의 일몰기간 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재정 지원, 전문문화예술법인의 조세 지원, 문화예술 관련 기부 활성화,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내용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창작 및 예술관련 투자 및 중소기업 활성화와 관련된 안건도 간헐적으로 나타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의된 내용은 대부분 중복적으로 건의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 2-34〉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건의서

구분	내용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건의서	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분야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76 조의2 신설)	○		○	○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_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연장(조특법 제5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3 신설)	○	○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상향조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구분	내용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74조)_예술의전당.전문예술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장(조특법 제74조)_박물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장(조특법 제74조)_미술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장(조특법 제74조)_도서관	○				
	도서관에 지출하는 손금산입(조특법 제73조 제1항)				○	○
	전문예술법인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범위 확대(조특법 제74조)		○	○	○	
	문화예술 분야 지출비용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제52조)		○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조특법 제136조)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제121의20조)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26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기업의 예술기부금 추가 세액공제(조특법 제76조)		○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제73조)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2008~2012)

〈표 2-35〉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평가서

구분	내용	연도				
		2012	2011	2010	2009	2008
평가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제1항제4호)_등록미술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제1항제4호)_예술의전당 · 전문예술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제1항제4호)_사립박물관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제1항제4호)_사립도서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_도서관			○		
	아시아중심문화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 20)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_도서관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연장(조특법 136조)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73조)			○	○	○
	박물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73조)			○	○	○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74조)				○	
	전문예술법인(예술의전당 등 국립예술기관·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제1항)					○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제74조제1항)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특법 제74조제1항)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2008~2012)

2)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안의 특징

-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안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문화예술재의 가치재적 성격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가치재(merit good)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 또한, 민간부문에서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른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의미(대표적인 가치재로는 교육, 의료, 공공 주택 건설, 공공 체육시설 운영 등이 있음)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말하지만, 가치재는 재화 소비에 경합성이 있고 배제 또한 가능한 점이 상이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제의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그러나 일몰법은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사안의 정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률 연장에 필요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
 - 2012년 세법개정안에 의해서 조세특례 기한의 연장된 사안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등(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5조)’,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제20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관 추가(조특법 제74조)’이며, 적용기한이 ‘12.12.31.에서 ‘15.12.31.로 3년 연장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조특법 제5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_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과 같은 창업지원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세액 등의 세액감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짐

- 문화예술 중 특히 공연예술은 인건비에 투입되는 비율이 큰 대표적인 인력중심 사업이며,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이 큰 산업
- 문화예술 관련 조직은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복잡화, 정책 효과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임(효과가 분산됨)
 - 예를 들어, 비슷한 문화예술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성질로 인해서 각각 다른 조세감면 건의를 해야 함
 - 참고로, 문화예술 단체는 법인과 임의단체로 구분되며, 법인의 경우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음(법인격을 가진 기관은 국공립의 경우, 국공립기관, 책임운영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이며, 민간의 경우, 사단·재단법인, 전문예술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있음)
- 문화예술 단체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방안과 국가 재정 정책간의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예술 단체의 재정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들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국가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탄탄한 근거를 필요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양상의 변화에 대한 재인식 필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장과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화예술 사업의 정책 대상이 세분화되어 기존의 창작자, 향수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만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도 증가하는 추세임(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등)
 - 특히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문화향수 지원 정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근로소득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논의가 있음
 - 현재 문화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중산층 이상 이므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존재

2. 시사점

가. 관광산업 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매년 각 정부부처로부터 기획재정부에 건의되는 조세감면안은 약 15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승인되는 건의안은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고려로 인해 조세감면 건의안의 수용 확대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
 - 기타 정부부처가 제출한 조세감면 건의안도 대부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안과 유사하게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¹⁵⁾
- 국회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부처 조세건의안에 대한 실질적 경제효과와 기타 산업과의 형평성, 조세정책 기조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므로, 문화관광산업에서는 매우 타당한 조세감면안이라도 수용이 불가한 사례가 발생함
 - 예컨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 건의안은 해외골프관광 수요 국내전환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과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수용되었으나, 국회는 서민정책과의 배치됨을 이유로 기각¹⁶⁾
 - 조세감면안에 대한 승인 결과에 근거할 때 조세감면안의 수용은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정치적 관계 및 국민 정서에 대한 고려 역시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15)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적용 확대 등이며, 농수산식품부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 개정, 교육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이 있음

16) 국회예산정책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내수경기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관광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경제파급 및 일자리창출 효과, 외화가득률을 인정받아 미래 창조적 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되지만, 소비산업이라는 인식오류의 고착화가 조세감면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제조업에 대해 편중된 금융 및 조세지원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
- 한편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행 우선순위 및 국가조세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등 전략적 대응이 결여된 점도 조세감면 건의안의 원활한 수용에 대한 한계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예컨대 국가조세정책이 외국인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폐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음식업에 대한 조세혜택 건의안은 원칙적으로 채택이 불가¹⁷⁾
 - 당해 관광시장의 여건에 대응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상 전체 업종의 조세감면을 추진한 점도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나. 문화산업 분야

- 제조업에서의 R&D 활동에 해당하는 기획개발 단계에 대한 조세감면의 불인정이나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는 콘텐츠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으로의 불인정, 콘텐츠 산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하는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특수성의 고려가 아직 요원한 상황¹⁸⁾
 - 기획개발 단계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향후 콘텐츠 제작에 암묵적으로 기여하는 일종의 무형자산의 일부가 됨. 연구개발(R&D)에서도 원천기술개발이나 실용화, 상용화 등 실

17) 외국인 관광객 및 주한 미군 등 외국인에 대한 음식업 서비스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국가조세 정책의 추세임

18)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야 함

생활에 응용가능한 기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비용의 절감이나 신상품 개발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은 주로 공학, 과학기술 등에 한정되고 석박사 인력 등과 같이 학력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업종에서 기획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시장에서의 성공 확률이 낮지만 가수 “싸이”처럼 고수의 뿐 아니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콘텐츠 업종은 일종의 벤처기업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에 접목하도록 유도하는 벤처기업은 수명주기가 짧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를 갖는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인증 역시 공학 기술과 관련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콘텐츠 업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실정
- 현 법령상 지식기반산업 중 콘텐츠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출판, 캐릭터, 만화, 디자인, 공예 등의 업종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부문에 대한 세제 지원이 힘든 상황

다. 문화예술 분야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세감면 건의안의 기획재정부 비수용 사유를 검토하면,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제 개선의 논의가 전 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2012년 상반기 중 45만 명 증가), 경로의존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크게는 서비스업의 조세차별 완화 및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분야의 조세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세감면 요구와 중장기적인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의 자료 수집, 분석이 필요함
- 조세감면의 가장 큰 원칙이자 걸림돌은 타 영역의 조세지원과의 형평성임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세 감면 요청의 내용 중 ‘영리목적의 예술행사,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공연장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향상조정’ 등이 대표적인 형평성으로 인해 조세감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임
 - 구체적으로, ‘공연장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모든 공연장의 대관료(일종의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은 다른 유사 업종과의 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음
 -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향상조정’의 경우, 세법상 규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은 즉시상각의제로 비용으로 간주되며, 세법에서 손비 100만 원을 인정한 것은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 중에 적은 액수를 관리하기 쉽게(회계처리의 용이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임(일반자산일 경우, 회계 상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으로 계상되며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계장치와 같은 것들로 미술품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님)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 1,000만 원은 자산성이 현저하므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투명성 문제,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문화예술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타 기부금을 받는 곳(단체, 시설)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부금의 쓸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음
- 2중 수혜 요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부여’의 경우를 보면, 조특법 상 세액공제는 대부분 일정조건에 대한 설비투자

관련된 세액공제임

- 반면,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는 R&D가 거의 유일한데, 투자 → 경제 활성화 →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혜택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자체가 투자활성화에 대해 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지출된 비용에 대한 혜택은 2중 수혜가 될 가능성 큼
- 따라서 사회경제의 구조, 형평성, 2중 수혜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하고, 논리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기존에 제안된 안건 중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선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경우, 현재 문화예술과 일반 국민이 만나는 접점이 기존과 다른 곳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조세 감면 혜택의 가능성이 있음
-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타 영역의 시설투자에도 조세 지원이 있는 현실에서 문화기반시설이라고 차별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 조세 감면 건의의 수용 가능성이 높음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접대비와 관련된 법률이 불가피함을 전제) 과도한 접대비가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하한의 폐지는 접대비 규제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만약 위 규정을 폐지한다면, 이를 악용해서 문화행사 티켓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한 10%를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임
-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의 경우 사회전체적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3장 ●●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제1절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검토

1. 검토 개요

- 기존에는 단순히 관광분야의 가격경쟁력 확보 취지로 감세가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확충과 국가 동력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역할을 확립할 목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음
 - 관광업계 뿐 아니라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관광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법·규제 개선 및 조세개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 관광산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외래객 유치 확대 및 내수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촉진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이 미흡한 상황임
- 관광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반면, 수익회수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관광활성화의 관건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일정부문 조세지원이 필요함
 - 관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시설 및 설비 개보수와 관광종사자 교육훈련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관광객 수요 증대 및 관광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세수입이 증가
-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추진 방향은 현행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영세 관광업계 지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 패러다임 변경에 집중되어야 함
- 현재 국가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이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관광분야 조세감면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 기조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관광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추진
- 새 정부가 조세정책 기조가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가능한 조세감면 연장 안건은 배제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 및 조세지원 정책이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차별 조항의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조세 항목이더라도 제조업보다 관광분야에 대해 과중하게 과세하는 사례가 존재
- 또한 관광산업은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및 부담금에서도 제조업과 차별된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실질적 조세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세 및 부담금에 대한 개선노력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조세감면 추진 방향

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 방한 외래관광객 및 국민 국내관광객 증가 속도에 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인 바, 숙박시설 부족문제가 관광객 유치 증대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및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객실수급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
- 숙박시설은 관광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므로 관광객 증가율 대비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미비는 관광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존재
- 2020년 방한외래객 2,000만 명 유치 등과 같은 관광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함

- 한편, 방한 외래객 관광은 대부분 쇼핑 등 저가 패키지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 및 재방문률이 높지 않은 등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관광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기반확충 투자에도 조세지원이 필요함
 -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을 상대로 우위를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재기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
- 조세특례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투자 등에 대한 감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가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관광숙박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해 개체수가 증가하면 소득세, 인지세, 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합리화

- 청년실업 해소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국가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산업은 기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및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조세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이 필요함
 - 예컨대, 종사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소세 비율을 상향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광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규정은 고용증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관광업 분야 인력시장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종사자의 자발적·비자발적 이직률도 기타 산업에 비해 높은 실정이므로, 관광산업의 고용안정화 차원에서도 조세지원을 통합 경영합리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3-1〉 관광업 연간 신규 인력 채용 및 이직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신규채용			연간이직 현황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41,088	22,415	18,673	33,898	18,489	15,420
여행업	8,964	4,361	4,333	6,792	3,412	3,379
관광숙박업	16,443	9,230	7,213	12,762	7,033	5,741
관광이용시설업	1,486	670	816	1,535	742	793
국제회의업	2,181	1,104	1,077	1,703	843	860
카지노업	911	451	460	881	406	475
유원시설업	1,217	727	490	1,139	675	464
관광편의시설업	10,156	5,872	4,284	9,086	5,379	3,70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조세특례를 통해 종업원할 사업소세 등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용 인구 증대에 의한 소득증대 및 민간소비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다. 조세 형평성 확립

- 외래관광객 유치에 수출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미 관광업은 대외 무역법에 포함된 산업일 뿐 아니라, 높은 경제파급효과를 인정받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차별이 존재함
- 집중성장시대에 고착된 실물경제 위주의 제조업 중심 가치관이 지속되며 금융 및 조세지원 혜택은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광업 등 서비스업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예컨대 국내에서의 생산이 불가능한 장치 및 설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광업 분야의 관세 면세비율은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한편 각종 세율의 차별적 적용은 제조업 및 관광업 뿐 아니라 동일한 관광산업 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세율의 합리화 및 조세형평성 확립이 필요함
 - 관광단지 개발 시 시행사업자 및 관광단지 입주업체 간에도 감세 혜택의 차별이 존재

제2절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1.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가. 건의 내용

- 관광숙박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기한 연장(2015. 12. 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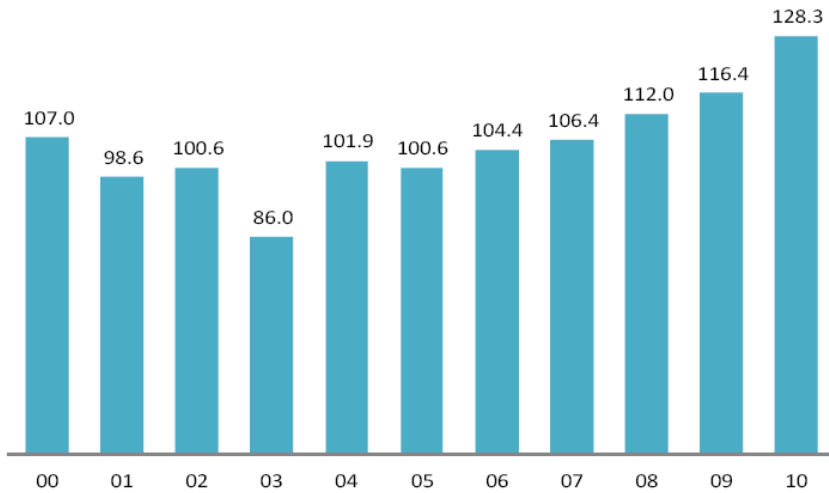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한류 및 쇼핑관광 활성화와 신규 항공노선 공급확대 등에 의해 우리나라 관광매력도가 향상된 데 따라 인바운드 시장이 급성장하여, 2012년에는 우리나라 인바운드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100만 명을 돌파함
 - 향후 방한 외래관광객은 2017년 1,600만 명, 2020년 2,0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인바운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방한 외래객 증가와 함께 국민 여가시간 확충에 의한 내수관광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관광객 증가율을 현저한 수준으로 하회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속도는 관광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2001년 이후 10년 동안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율은 90.3%증가하였으나, 관광의 기본시설인 호텔객실 증가율은 35.9%에 그치고 있는 상황
- 관광호텔 1 객실 당 방한 외래객 수를 보면, 1991년의 경우 77.4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28.3명으로 증가함으로써, 객실부족 현상은 향후에도 지

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 최대일률 및 McIntosh 방법 적용을 통한 추정 시 방한 외래관광객이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2015년에는 약 5,506실의 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¹⁹⁾



[그림 3-1] 관광호텔 객실 1개당 외래관광객 수

〈표 3-2〉 관광숙박 수요 전망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호텔이용현황 근거 숙박수요 추정						
	외국인1일평균 숙박수요(A)	28,809	32,381	6,073	39,824	43,966
	내국인1일평균 숙박수요(B)	7,570	7,888	8,248	8,624	9,018
	전체숙박수요(C=A+B)	36,379	40,270	44,321	48,449	52,984

-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관광숙박시설 공급량이 관광객 증가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관광숙박시설 부족 문제가 관광객 유치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명확함

19) McIntosh 방법은 적정 객실이용률(occupancy room rate; OCC)에 대한 기본 가정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McIntosh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적정객실이용률을 65.2%를 적용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관광호텔의 객실이용률은 61.6%~68.8%인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근거한 것임

-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각종 법·규제 개선 노력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등을 통한 우선적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인 상황임
 -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융자의 경우 신축은 4년 거치 5년 상환이며, 개보수는 3년 거치 4년 상환임. 다만 중저가 숙박시설의 경우 신축은 5년 거치 및 5년 상환이며, 개보수는 4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우대
 - 관광중소기업 및 관광숙박시설은 각각 $-0.75\%P$ 및 $-1.25\%P$ 의 우대금리를 적용

〈표 3-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대출기간

구 분		대 출 기 간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다만,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다만,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은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공고문 자료 재인용

- 관광숙박시설 확충 부문에 매년 1,800억 원~2,000억 원 정도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출되고 있지만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한 관광사업체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인 바, 실질적인 관광숙박시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조세지원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
 -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는 결국 시중은행이 대출신청 업체의 담보물 등을 검토하여 대출규모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융자가 대형 호텔에 편중지원 되는 상황이 발생
 - 관광산업의 경우 기타 산업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은 높은데 반해, 수익회수기간이 비교적 장기에 해당하는 바,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금융 및 조세지원이 필요

〈표 3-4〉 관광숙박업 평균 자본금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자본금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업
전체	7,641	6,983	11,065	8,614
매출액 규모별				
5억원 미만	1,900	1,787	3,165	68
5억원~15억원 미만	4,535	3,166	18,462	1,396
15억원~40억원 미만	4,144	3,086	14,118	4,101
40억원 이상	15,324	19,485	5,458	11,150
종사자 규모별				
1명~10명 미만	3,143	2,839	2,786	6,287
10명~30명 미만	3,403	2,482	15,697	1,806
30명~50명 미만	9,916	6,137	16,259	15,198
50명~100명 미만	7,505	5,781	6,986	10,413
100명 이상	24,514	31,126	100	11,276
존속기간별				
5년 미만	8,977	7,536	12,522	11,665
5년~10년 미만	3,561	3,862	3,405	1,945
10년 이상	9,029	8,584	30,371	8,6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속적 개보수가 필요한 특성이 존재하므로, 관광숙박업체의 확충 뿐 아니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서도 운영재원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거 3년 주기로 등급심사를 받아야하므로 등급유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등의 비용을 지속 투입해야 하지만, 10년 이상 노후업체 및 매출액 15억 이하 업체가 40% 이상을 차지
 - 매출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관광호텔업에서도 평균 5억 5천만 원의 시설투자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10년 이상 업체는 약 10억 원 이상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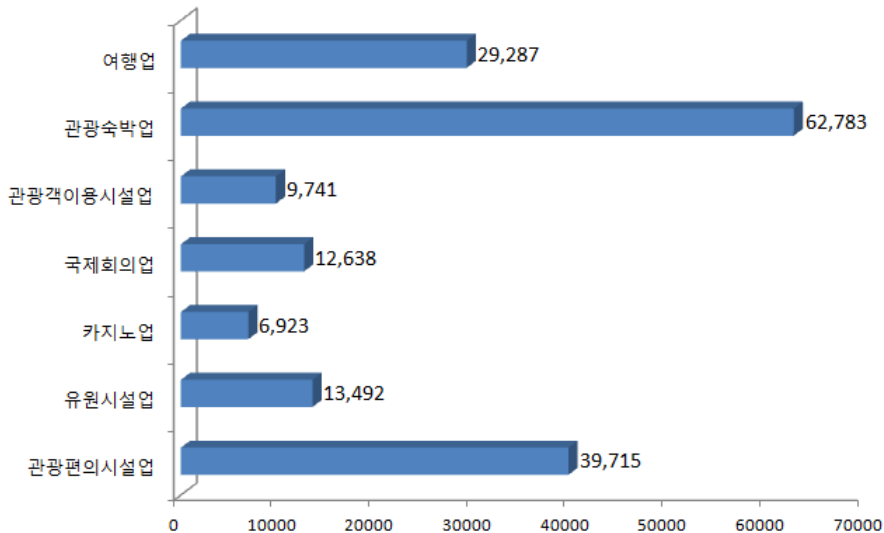
〈표 3-5〉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투자비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시설투자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업
전체	1,029	1,112	653	884
매출액 규모별				
5억원 미만	602	549	1,051	468
5억원~15억원 미만	192	157	113	812
15억원~40억원 미만	459	272	992	898
40억원 이상	2,273	3,501	645	898
종사자 규모별				
1명~10명 미만	66	68	24	94
10명~30명 미만	477	460	718	438
30명~50명 미만	650	224	1,344	1,253
50명~100명 미만	592	515	728	686
100명 이상	4,879	6,446	238	1,714
존속기간별				
5년 미만	1,604	1,904	723	1131
5년~10년 미만	297	276	487	253
10년 이상	994	1,026	867	9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한편, 관광숙박의 경우 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타 관광사업체에 비해서도 종사원 고용이 높은 수준이므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기준 관광숙박업 종사자는 62,783명으로, 관광편의시설업(39,715명), 여행업(29,287명), 유원시설업(13,492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 관광호텔업은接客, 하우스키핑, 룸서비스, 부대시설 운영 등 전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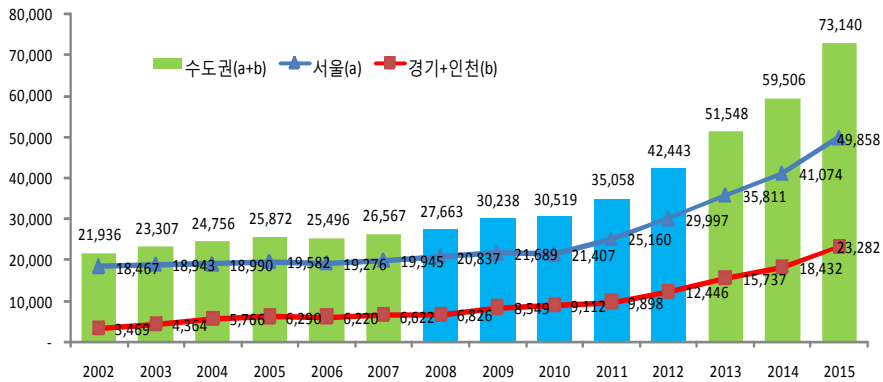


[그림 3-2] 관광업 종사자수 현황(2011)

-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의 취득세 및 등록세 완화’와 중저가 숙박시설 용자지원 개선 등의 방안과 같이,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과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함

2) 정책효과

- 현재 관광숙박시설 확충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건축규제 및 투자비용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지면 중소규모 관광숙박시설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15년 수도권 지역 관광숙박객실 수는 73,140실로 증가함으로써 방한 외래객 및 국민 국내관광객의 숙박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현황 및 전망

-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경우 감면세액에 비해 관광숙박업체 확충 및 관광숙박업 매출액 증대를 통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가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사업의 경우 2011년 당시 관광숙박에 대한 용자 예산 2,131억 원을 집행하여 각각 102%의 객실증가와 개보수 호텔 매출액 132% 증가를 달성²⁰⁾

〈표 3-6〉 관광숙박업 평균 매출액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매출액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사자 규모별				
1명~10명 미만	515,667	245,461	104,758	165,448
10명~30명 미만	546,871	405,711	23,519	117,642
30명~50명 미만	447,631	247,296	52,100	148,235
50명~100명 미만	815,676	449,186	53,558	312,932
100명 이상	3,815,098	3,342,140	8,497	464,4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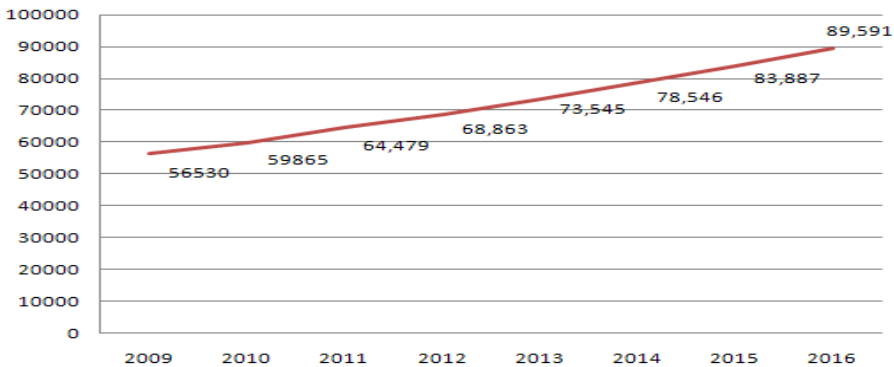
20) 관광기금 용자사업의 전국 관광호텔 객실증가 기여도(%)는 관광기금 지원 호텔 증가 객실수(A) / 전국 관광호텔 객실 증가수(B)를 통해 추정하였으며, 관광기금 용자사업의 전국 관광호텔 객실증가 기여도는 매출액 증가율(%) = (개보수 후 매출액 - 개보수 전 매출액) / 개보수 전 매출액 × 100의 산식을 통해 계산함

[산출근거]=①×②×③×④

- ① 관광숙박업 연간 과세소득 추정 =
- ② 중소기업 매출액 비율 = 45%
- ③ 세율(투자세율)
- ④ 감면율 = 10%

- 관광숙박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관광객 증가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경우 관광숙박업 종사자의 채용이 증가하므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McIntish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1일 객실 수요 전망결과에 근거하여 계산할 때, 관광숙박업 종사인력은 2012년에 비해 2016년에는 약 20,7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²¹⁾

종사자수



[그림 3-4] 관광숙박업 인력수요 전망

21) 2011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할 때 관광숙박업 1개소 당 평균종사인력은 67.0명 수준임

〈표 3-7〉 관광숙박업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건의안

제목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1항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및 쇼핑관광 활성화와 신규 항공노선 확대에 의해 방한 외래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관광숙박객실 부족문제는 향후 외래객 유치의 한계로 작용할 전망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방한 외래객은 인바운드 사상 처음으로 1,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0년에는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숙박객실 확충은 저조하며 5,500실 이상이 부족한 상황 ○ 관광숙박업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초기 투자자 대규모인데 반해 수익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원활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임 ○ 외래객 유치는 수출과 동일하게 외화획득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비롯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므로, 외래객 유치에 대한 정책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의 조세지원이 필요함 ○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관광숙박업체 확충 및 매출액이 증대되었을 때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가 조세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약 2,131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객실 수는 102%, 매출액은 132% 증가 ○ 한편 관광숙박업체 공급 증대로 인해 관광숙박업 부문 고용이 증가할 경우 약 20,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은 하우스키핑,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리셉션 등의 인력 서비스가 다수 필요하므로 기타 관광업종에 비해 고용비용이 높은 편으로, 관광숙박업 1개소 당 평균종사인력은 67명 수준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초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관광숙박업 대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시설개보수 부문 1,196억 원, 개보수 자금 633억 원 운영지원자금 303억 원 - 2012년 : 건설자금 378억 원, 개보수 자금 199억 원 운영지원자금 12억원('12년 상반기)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여부는 시중은행이 결정하게 되는 바, 은행은 신용리스크 회피를 위해 대출액 수준을 상회하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세한 중소규모 관광숙박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2.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²²⁾

가. 건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개정을 통한 유원시설업 관세 경감을 확대
 - 관광 사업에 관련한 유원시설 등의 장비 수입 시 관세 경감 항목에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 유원시설업의 놀이기구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률을 기타 산업과 동일한 65%~85%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립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정책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최근 국내외 놀이문화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원시설의 규모나 형태도 더욱 복잡하고 대형화, 첨단화로 다양하게 진화되어, 관광객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최근 들어서는 방한 외래객 시장의 주요 관광 상품은 쇼핑관광인 바, 외래객의 체류일수 연장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관광리조트 개발 및 유원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근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유희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종합유원시설업체 방문도 주요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
- 다만, 유원시설업에 설치된 롤러코스터 및 자이로드롭 등 탑승기구는 최첨단 장비이므로 안전 및 기술 등의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기준 국내 유원시설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사설물은 2,506

22) 유희시설이란 아동공원, 근린공원, 지역공원, 종합공원 등 각종 공원에 설치하는 운동 및 오락시설과 유원시설업의 놀이기구 등을 지칭함

종류 4,912개인 것으로 파악

〈표 3-8〉 유원시설업 유기사설물 현황(2011)

(단위: 개)

구분	유기사설물							
	전체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종류	시설수	종류	시설수	종류	시설수	종류	시설수
전체	2,506	4,912	655	1,056	791	1,678	1,060	2,178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721	1,310	17	19	134	155	570	1,136
5천만원~3억원 미만	568	1,439	16	25	254	586	298	828
3억원~15억원 미만	420	804	39	39	217	579	164	186
15억원 이상	795	1,360	583	974	185	358	27	28
종사자규모별								
1명~5명 미만	894	1,782	12	12	281	451	601	1,319
5명~10명 미만	353	395	38	48	157	189	158	158
10명~20명 미만	488	1,429	54	97	144	641	290	691
20명~50명 미만	345	399	193	219	146	174	6	6
50명 이상	426	910	358	681	63	224	5	5
존속기간별								
5년 미만	1,094	2,345	193	196	272	779	629	1,070
5년~10년 미만	312	470	91	108	151	292	70	70
10년 이상	1,099	2,099	370	752	368	608	361	7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과 관광업 간의 경감세율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관세경감항목을 정하고 65%~85%까지 경감해주고 있으나, 유원시설의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률은 8%에 불과
- 일반적으로 유원시설업체에 설치되는 탑승기구의 개당 수입비용은 수십 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므로 인공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유원시설업

체에게는 상당한 경영압박으로 작용하며, 조세형평에도 위배됨

- 자본금 80억 원 및 연간 매출액 15억 원 이상의 대규모 유원시설업 외에 자본금 20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체도 존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원시설 수입비용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실제 연간 시설투자비도 6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표 3-9〉 유원시설업 자본금 분포 현황(2011)

(단위: 개)

구분	평균 자본금				
	전체	1억원 미만	1억원 ~3억원 미만	3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전체	368	160	89	14	105
종합유원시설업	42	7	9	2	25
일반유원시설업	178	56	47	12	63
기타유원시설업	148	98	34	0	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3-10〉 유원시설업 평균 시설투자비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시설투자비			
	전체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전체	639	2,871	608	42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42	194	107	10
5천만원~3억원 미만	83	14	111	13
3억원~15억원 미만	627	3,900	668	87
15억원 이상	2,388	3,511	1,751	737
존속기간별				
5년 미만	226	1,223	289	29
5년~10년 미만	508	1,227	703	12
10년 이상	1,337	4,454	919	1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만일 유원시설 수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규 장치의 설치에 소극적일 경우 방문객 수요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경영이 더욱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2011년 기준 국내 유원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용자 수는 약 13,500명에 달하고 있으므로, 유원시설업에 대한 관세 경감을 통해 경영의 원활화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유원시설업에서는 30세 미만의 청년층 종사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므로 청년 실업문제 대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

〈표 3-11〉 유원시설업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전체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기타 종사자
전체	13,492	182	51	7,455	5,788	16
업종별						
종합유원시설업	7,414	7	5	3,711	3,692	0
일반유원시설업	5,095	83	28	3,203	1,771	10
기타유원시설업	983	93	19	541	325	5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644	100	32	196	330	5
5천만원~3억원 미만	1,752	49	13	690	1,000	0
3억원~15억원 미만	884	32	6	544	301	0
15억원 이상	10,192	0	0	6,026	4,156	10
종사자 규모별						
1명~5명 미만	360	100	17	155	83	5
5명~10명 미만	294	36	14	178	67	0
10명~20명 미만	825	38	18	363	402	4
20명~50명 미만	1,584	9	2	1,192	377	4
50명 이상	10,428	0	0	5,568	4,859	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3-12〉 유원시설업 연령별 종사자수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연령별 종사자수						
	전체	30세 미만	30세 ~ 4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	50세 ~ 60세 미만	60세 ~ 65세 미만	65세 이상
전체	13,259	5,942	3,016	2,290	1,277	515	220
업종별							
종합유원시설업	7,403	3,537	1,668	1,109	615	327	146
일반유원시설업	4,985	2,025	1,177	1,020	568	164	29
기타유원시설업	871	380	170	160	93	23	45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532	254	73	96	32	21	56
5천만원~3억원 미만	1,690	913	330	259	157	29	3
3억원~15억원 미만	845	380	151	132	119	59	5
15억원 이상	10,192	4,395	2,462	1,803	970	405	157
종사자 규모별							
1명~5명 미만	243	45	68	54	58	17	1
5명~10명 미만	245	73	47	52	54	16	4
10명~20명 미만	769	382	95	135	74	23	59
20명~50명 미만	1,573	677	365	344	157	23	8
50명 이상	10,428	4,766	2,440	1,705	934	435	1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따라서 국내 관광산업 발전과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관광패러다임의 선진화와 경제성장 촉진은 물론, 제조업 등 기타 산업과의 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국내에서의 생산이 불가능한 유희시설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율을 제조업 등 기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필요가 있음

2) 정책효과

- 유원시설업 휴의시설 중 국내에서의 생산이 불가능한 장치 및 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을 현행 8%에서 제조업 및 기타 산업 수준인 65~8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유원시설업의 매출액 증가를 통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규 유희시설의 도입 활성화를 통해 유원시설업 방문객 증대로 매출액

이 증가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증대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유원시설업의 매출총액은 1조 435억으로 추정되었는데, 수입 유원시설에 대한 관세 경감률을 6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약 6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표 3-13〉 유원시설업 매출액 규모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연간 총매출액			
	전체	종합 유원시설업	일반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전체	1,043,514	747,856	252,970	42,687
종사자 규모별				
1명~5명 미만	44,883	159	21,734	22,991
5명~10명 미만	15,725	1,463	10,886	3,376
10명~20명 미만	38,544	10,153	20,939	7,452
20명~50명 미만	225,039	147,652	71,702	5,685
50명 이상	719,323	588,430	127,710	3,184
존속기간별				
5년 미만	322,724	218,790	90,382	13,552
5년~10년 미만	124,658	34,995	84,449	3,213
10년 이상	596,131	494,071	76,139	25,921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21,366	571	13,486	7,308
회사법인	928,259	715,867	181,972	30,421
회사외법인	59,089	31,418	23,513	4,158
비법인단체	34,799	-	33,999	8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유희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를 현행 8%에서 기타 산업과 동일한 65%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1,374명으로 계산됨
 - 2011년 기준 관광산업 분야 고용유발계수인 0.0229를 적용하여 계산

〈표 3-14〉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건의안

제목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개정을 통한 유원시설업 관세 경감을 확대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국내외 유원시설업의 놀이기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설의 규모나 형태가 더욱 복잡하고 대형화 및 첨단화로 진행되어, 관광객에 대해 보다 높은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전되는 추세임 ○ 현행 방한 외래객에 대한 주요 관광프로그램이 쇼핑관광이므로 체제일 수 및 지출액 수준이 낮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조트 및 유원시설의 개발이 강조되고 있지만, 유희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실정임 ○ 국내에서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 및 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할 시 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 대해서는 65~85%의 경감률을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유희시설은 8%에 불과한 실정인 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감세의 비율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 ○ 유원시설업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및 설비의 수입을 통한 모델링이 필요하며, 외래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등 기타 산업과의 관세 경감을 형평성이 필요함 ○ 국내 제작이 불가능한 유희시설에 대한 수입관세 경감률이 현행 보다 인상될 경우, 방문객 증대에 의한 매출액 상승으로 조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관세 경감률을 65%로 인상하면 첫 해에는 약 600억 원의 조세수입 증가가 발생 ○ 또, 유원시설업의 설비 증대 및 방문객이 증대하면 관리 인원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므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37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 - 유원시설업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자는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할 전망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600억 원	1,200억 원	1,800억 원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 운영자금 788백만 원 지원 		
참고 및 설명자료			

3. MICE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가. 건의내용

- MICE 산업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함
 -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당해 시·군·구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정책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종업원할 사업소세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체에 근무하는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급여총액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업계의 신규인력 추가채용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회의업 사업체 수는 398개이고 5년 미만의 신생 사업체가 15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50인 이상의 업체는 49개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실정임
 -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을 의도적으로 50인 이하로 유지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

〈표 3-15〉 국제회의업 사업체수 현황(2011)

(단위: 개)

구분	사업체수							
	전체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 3억원 미만	3억원 ~ 5억원 미만	5억원 ~1 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종사자 규모별	398	67	0	4	14	31	33	249
1명~5명 미만	75	30	0	1	7	25	9	3
5명~10명 미만	42	7	0	0	7	2	3	22
10명~20명 미만	146	11	0	1	0	0	21	114
20명~50명 미만	85	18	0	0	0	0	0	68
50명 이상	49	0	0	2	0	5	0	42
존속기간별								
5년 미만	156	39	0	3	7	24	18	65
5년~10년 미만	124	6	0	0	2	3	7	106
10년 이상	118	21	0	1	5	5	8	78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17	3	0	0	5	0	10	0
회사법인	361	57	0	4	9	31	23	236
회사외법인	20	7	0	0	0	0	0	1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회의업 종사자수는 12,63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10년 이상 운영 업체와 회사법인에 피고용 된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장기간 운영 경력을 보유한 회사법인 국제회의업체가 대규모 사업체이며,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고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표 3-16〉 국제회의업 종사자수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종사자수
전체	12,638
종사자 규모별	
1명~5명 미만	152
5명~10명 미만	304
10명~20명 미만	1,877
20명~50명 미만	2,346
50명 이상	7,960
존속기간별	
5년 미만	1,651
5년~10년 미만	3,673
10년 이상	7,314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129
회사법인	11,998
회사외법인	5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피고용인 50명 이상 규모의 국제회의업인 경우 30세 미만 청년층 종사자수는 전체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세~40세 미만 계층은 40.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제회의 진행 노하우(Know-how) 및 경험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30세~40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

〈표 3-17〉 국제회의업 연령별 종사자수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종사자수						
	30세 미만	30세 ~40세 미만	40세 ~50세 미만	50세 ~60세 미만	60세 ~65세 미만	65세 이상	합계
1명~5명 미만	66	59	14	4	0	5	148
5명~10명 미만	91	148	41	14	0	0	294
10명~20명 미만	582	850	356	63	10	2	1,863
20명~50명 미만	840	1,122	297	76	0	10	2,345
50명 이상	2,357	3,227	1,393	855	87	36	7,95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국제회의업에서는 매년 전체 종사자의 18%에 해당하는 2,181명이 신규 채용되고 있지만, 전체 종사자의 약 14%인 1,703명이 이직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의 안정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회사법인에서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용불안은 업체 규모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

〈표 3-18〉 국제회의업 연간 신규 인력채용 및 이직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신규채용			연간이직 현황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181	1,104	1,077	1,703	843	860
종사자 규모별						
1명~5명 미만	165	16	49	35	13	22
5명~10명 미만	235	98	137	69	25	43
10명~20명 미만	395	173	222	340	167	173
20명~50명 미만	441	199	242	367	171	195
50명 이상	1,045	618	427	893	466	427
매출액 규모별						
3천만원 미만	157	75	81	117	65	52
3천만원~5천만원 미만	0	0	0	0	0	0
5천만원~1억원 미만	13	5	8	6	1	5
1억원~3억원 미만	21	7	14	19	0	19
3억원~5억원 미만	116	39	77	133	60	73
5억원~10억원	223	91	132	97	41	56
10억원 이상	1,652	887	765	1,331	676	655
존속기간별						
5년 미만	555	236	319	238	120	118
5년~10년 미만	881	505	376	660	341	319
10년 이상	745	363	382	805	382	423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21	0	21	17	0	17
회사법인	2,147	1,102	1,045	1,653	819	834
회사외법인	13	2	11	34	24	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국제회의업계에 따르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종사자 고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현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정기간 면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회의업 역시 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통역서비스 자격증 소유자의 실업 비율이 높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 시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

2) 정책효과

- 50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국제회의업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일정기간 면세하는 경우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국제회의업체는 절감된 재원을 직원 교육비, 직원고용, R&D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제회의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 50인 이상 종사자 고용 국제회의업의 2011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1조 2,809억 원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약 64억 원 수준이며, 이를 면세할 경우 첫 해에는 약 15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관광산업부문 고용유발계수 0.0229를 적용하여 추정
 -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 직원 교육 및 R&D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회의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신규 고용된 종사자로 인한 소득세 증대의 긍정적 효과도 발생

〈표 3-19〉 국제회의업 연간 총매출액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연간 총매출액
종사자 규모별	
1명~5명 미만	19,757
5명~10명 미만	86,926
10명~20명 미만	346,712
20명~50명 미만	292,700
50명 이상	1,280,935
존속기간별	
5년 미만	202,667
5년~10년 미만	442,159
10년 이상	1,382,205
조직형태별	
개인사업체	7,262
회사법인	1,981,657
회사외법인	38,1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3-20〉 MICE산업 종업원할 사업소세 한시적 감면

제목	MICE산업 종업원할 사업소세 감면		
건의내용	MICE 산업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함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할 사업소세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체에 근무하는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급여총액의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업계의 신규인력 추가채용기 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회의업 사업체 수는 398개이고 5년 미만의 신생 사업체가 156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50인 이상의 업체는 49개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용을 의도적으로 50인 이하로 유지하는 경향 존재 ○ 50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한 국제회의업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일정기간 면세하는 경우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국제회의업체는 절감된 재원을 직원 교육비, 직원고용, R&D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제회의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 50인 이상 종사자 고용 국제회의업의 2011년 기준 총 매출액은 약 1조 2,809억 원이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약 64억 원 수준이며, 이를 면세할 경우 첫 해에는 약 15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부문 고용유발계수 0.0229를 적용하여 추정 - 신규 일자리 창출 외에 직원 교육 및 R&D를 통해 우리나라 국제회의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신규 고용된 종사자로 인한 소득세 증대의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원 5억 4천만 원(2012년 상반기) 		

4.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가. 건의내용

- 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4호 및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1호의 개정
 - 지방세법 제277조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감면 대상에 관광사업자를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의 개정을 통해 유원시설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

〈표 3-21〉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안
<p>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법 제277조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광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6.12.30></p> <p>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p>	<p>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6.12.30></p> <p>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 관광진흥법의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는 제외한다)</p>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정책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현행 지방세법 상 관광단지 개발 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관광단지 내에 입지한 유원시설업은 부동산 및 오락시설 취득 시 취득세 납부대상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감면혜택이 없는 상황
-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내수진작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관광단지 개발 시행자는 물론 관광사업체로부터도 유발되는 바, 세제 혜택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 관광 사업은 반드시 부동산을 필요로 하고, 장치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초기의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이 존재함
- 한편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유원지 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책효과

- 관광단지개발사업자와 관광사업체와의 조세적용 형평성 확립과 더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상 업종 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법을 구축

할 수 있음

〈표 3-22〉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제목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277조(관광단지개발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4호 및 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1호의 개정 – 지방세법 제277조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감면 대상에 관광사업자를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의 개정을 통해 유원시설 대상 제외 규정을 신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지방세법 상 관광단지 개발 시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지만, 관광단지 내에 입지한 유원시설업은 부동산 및 오락시설 취득 시 취득세 납부대상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관광사업자에게는 감면혜택이 없는 상황 ○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내수진작효과, 지역균형발전효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관광단지 개발 시행자는 물론 관광사업체로부터도 유발되는 바, 세제 혜택을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 관광 사업은 반드시 부동산을 필요로 하고, 장치사업으로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업초기의 투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해 줄 필요성이 존재함 ○ 관광단지개발사업자와 관광사업체와의 조세적용 형평성 확립과 더 나아가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상 업종 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한편,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법을 구축할 수 있음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없음		

5.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

가. 건의내용

-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교육, 조리연구시설의 확충, 관광호텔 객실 개보수 투자 시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정책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제조업 등 타 업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으나,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임
-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에서 나타낸 바와 같음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우대(중소 7%, 일반 3%)
 - R&D 세액공제 우대(중소: ①, ②중 선택, 일반: ②의 40%만 적용)
 - ① 당해 연도 R&D비용×15%,
 - ② (당해 연도 R&D비용-4년 평균 R&D비용)×50%
 - 특허권 등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 우대(중소 7%, 일반 3%)
 -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과세표준의 10%(일반 15%)
- 관광호텔은 투숙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광진흥법상에 근거하여 3년을 주기로 호텔시설 및 설비와 종사자 응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영세호텔에는 시설개보수 및 평가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함
 - 관광호텔 등급평가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로 인해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은 물론 등급평가를 기피하는 호텔업체가 존재

- 관광호텔의 시설개보수 및 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원 교육 등은 관광만족도 제고 및 외래객 유치 증대에 이바지 하므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의 취지 달성을 위해 감세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정책효과

-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시행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육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관광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관광호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설 및 설비와 서비스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투숙객들이 증가함으로써 매출이 증대되면,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기준 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관광호텔이 생산성향상시설 분야에 투자한 평균 비용이 1,267백만 원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1개 업체당 평균 세수감면액은 약 8,900만 원으로 추정

〈표 3-23〉 관광숙박업 평균 시설투자비 현황(2011)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시설투자비			
	전체	관광호텔업	기타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종사자 규모별				
1명~10명 미만	66	68	24	94
10명~30명 미만	477	460	718	438
30명~50명 미만	650	224	1,344	1,253
50명~100명 미만	592	515	728	686
100명 이상	4,879	6,446	238	1,7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3-24〉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혜택 확대

제목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혜택 확대		
건의내용	관광호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교육, 조리연구시설의 확충, 관광호텔 객실 개, 보수 투자 시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등 타 업종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조세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으나, 관광 호텔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임 ○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에서 나타낸 바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우대(중소 7%, 일반 3%) - R&D 세액공제 우대(중소: ①,②중 선택, 일반: ②의 40%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당해 연도 R&D비용×15%, ② (당해 연도 R&D비용-4년 평균 R&D비용)×50% - 특허권 등 기술 취득시 세액공제 우대(중소 7%, 일반 3%) - 최저한세 우대적용 등: 과세표준의 10%(일반 15%) ○ 관광호텔의 시설개보수 및 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원 교육 등은 관광만족도 제고 및 외래객 유치 증대에 이바지 하므로, 관광수용 태세 개선의 취지 달성을 위해 감세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 시행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육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관광호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8,900만	17,800만	26,700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관광숙박업 대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시설개보수 부문 1,196억 원, 개보수 자금 633억 원 운영지원자금 303억 원 - 2012년 : 건설자금 378억 원, 개보수 자금 199억 원 운영지원자금 12억원('12년 상반기)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여부는 시중은행이 결정하게 되는 바, 은행은 신용리스크 회피를 위해 대출액 수준을 상회하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세한 중소기업도 관광숙박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6. 소결

- 본 연구에서는 국가 경제상황 및 조세정책과 관광시장의 당면과제를 고려하여 관광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세감면 건의안을 도출함
- 관광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에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수익 회수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조세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국책사업과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감세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현가능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방법을 통해 관광분야 감세안을 도출함
- 관광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가 높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감세정책을 통한 투자 촉진 및 운영비용 감면 등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증대를 추진하는 현행 조세정책 기조를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 관광분야에 대한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조세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관광사업체 확충 및 매출액 증대, 관광종사자 고용 증가를 통해 소득세, 소비세, 부가세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됨
- 현재 우리나라 관광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관광객 증가율과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는 관광숙박객실 공급부족이며 향후 외래객 유치 확대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 또 경제 집중성장 시대에 고착된 제조업 중심 정책과 관광산업을 소비성 사치산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개선하여 제조업과 관광산업 간의 세율 형평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것이므로 국세 감

면 분야에 국한되어야 하나, 관광산업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합리화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표 3-25〉 관광분야 조세감면 건의안

조세감면 건의안	비고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기한 연장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신규
MICE산업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제	신규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신규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혜택 확대	신규

제4장 ●●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제1절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검토

1. 검토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조세감면 건의안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함
- 연장 건과 신규 제안 건을 구분해서 연장 건을 먼저 배치하여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고 신규 건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임
- 새 정부에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이를 감안해야 함
-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임. 지금처럼 세제 감면으로 인해 10명 정도의 고용 유발효과 밖에 안 생긴다면 세제 당국으로서는 세제 감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 세법 조문상 네거티브 방식은 안 됨. 법조문은 항상 명확하고 자세하게 나와야 함
- PF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 요구는 수많은 PF가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다른 산업에서 PF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세액 공제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 및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의문.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의하는 안인데, 현재 클러스터가 조성된 곳이 거의 없어 미래 지향적 선제적 건의사항일 수밖에 없을 것임

- 조특법보다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특법 바꾸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세제 감면은 주로 영화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게임이나 방송 쪽 매출액 등이 높으므로 이를 반영한 세제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생산유발효과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함

2. 조세감면 추진 방향

- 본 보고서에서 신규제안에 대해서는 타 산업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로 한정하여 접근함
 -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의 신규제안과,
 - 2012년 문화부에서 제안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안,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제안,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에 대한 손금인정 제안함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제안은 2013년 1월 1일부로 반영되었음

제2절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방안

1.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 건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과학기술분야에 인정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법 제10조)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문화산업의 창작 및 인력개발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개정

※ 문화산업 분야에 추가되는 창작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1) 기술 및 창작 개발비
 -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지원인건비 포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 문화산업기업이 지출한 창작·기술개발비
- (2) 인력개발비
 - 창작력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생략) 2. (생략) 3. (신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생략) 2. (생략) 3.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창조산업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창조산업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신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창조산업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에 따른 창조산업 분야별 대상프로젝트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창조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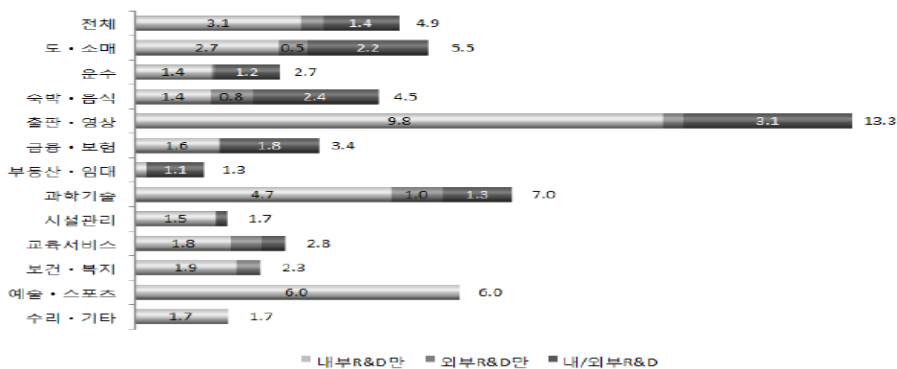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혁신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는 지식서비스 산업이 리드하는 고도 서비스 경제로 재편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대표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인 문화서비스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제조업에 비해 약 2배이며, OECD 실증분석에 의하면 지식서비스 투입을 1% 늘리면 부가가치가 평균 2.6~4.2%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진국들은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NIPA, 2011)
- 하드웨어 또는 제품 위주의 R&D는 주로 해당 상품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지만, 문화서비스 R&D는 해당 제품은 물론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끼치고 특히 고용 부문에서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
 - 문화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하나의 작품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R&D 기획·수행·활용에 있어 기존 제조업 방식과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문화와 콘텐츠라는 속성을 통해 융복합화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시너지를 제고하는 R&D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함
 - ICT 분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른 문화서비스 R&D 정책을 연계시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강점인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서비스분야임. 동 분야에 대한 서비스 R&D 정책으로 신서비스를 개발할 뿐 아니라 해외 수출 등으로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 ICT는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이나 모바일 서비스 시장 등의 창출과 확대를 가져옴. ICT가 발달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PC, 가정용 게임기,

TV, 통신, 음악, 신문, 서적 등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독립된 개체로는 가치가 증대될 수 없기에 디지털 콘텐츠를 네트워크상에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서비스 기능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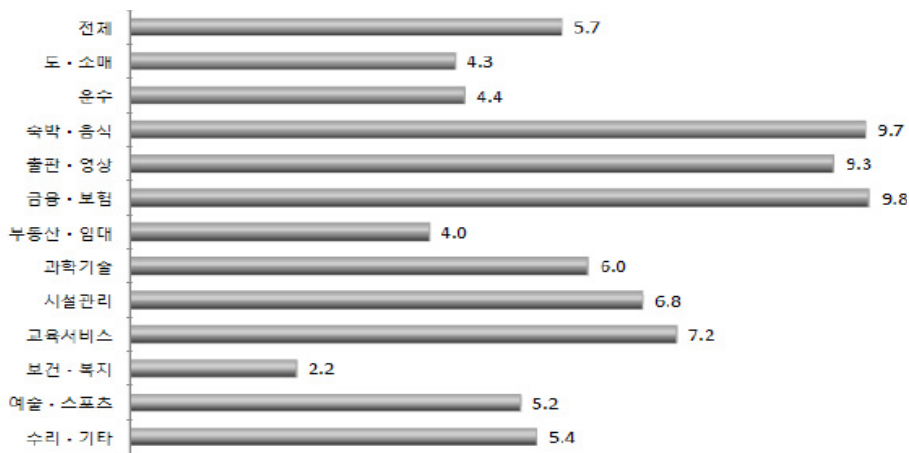
- 업계 간 장벽이 무너지고 산업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여 융·복합적 신 서비스에 의해 부가가치는 증대되고 신규시장이 출현
- 이러한 점들은 R&D와 혁신활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음
- 전체 서비스 업종 중 문화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출판·영상 및 예술·스포츠 분야에서 R&D 활동 비율과 혁신 활동율은 평균 수치보다 높음
- R&D 활동(내·외부 모두 포함) 비율은 출판·영상이 13.3%로 가장 높으며 과학기술이 7.0%, 도소매 5.5%, 예술·스포츠 6.0%로 나타남
- 혁신 활동율은 출판·영상 18.8%, 금융·보험 14.5%, 과학기술 12.0% 순이며 예술·스포츠는 5.2%로 나타남
- 이는 문화서비스분야가 이용자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D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9)

[그림 4-1] 연구개발(R&D)활동 비율: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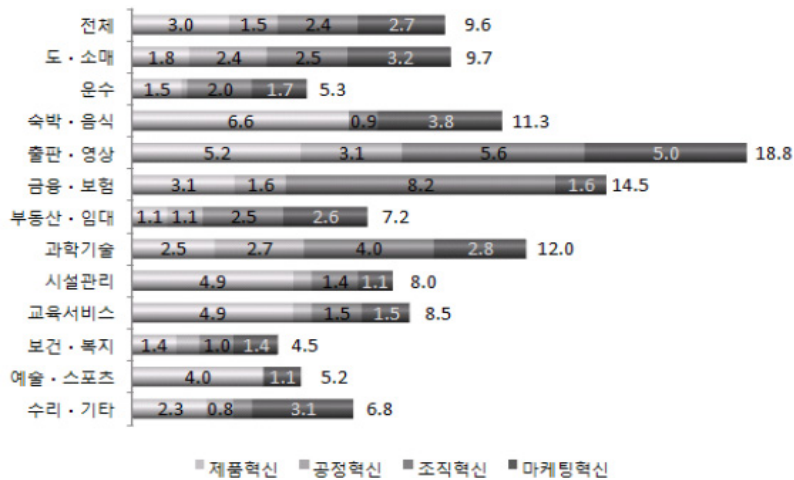
- 혁신활동기업의 혁신활동비용(연구개발활동 비용과 혁신활동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보면 출판·영상 분야가 3억 원 이상 지출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업종 내에서 출판·영상 분야가 상대적으로 혁신활동 비용이 많으나 예술·스포츠 분야는 혁신활동 비용이 영세
 - 연구개발활동 비용으로 3억 원 이상 지출한 업종은 출판 영상이 42%, 그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27%, 도·소매 26% 순이며 예술·스포츠 업종은 0%로 나타남
 - 혁신활동 비용을 3억 원 이상 지출한 기업의 비중은 출판 영상이 45%로 부동산·임대업 61%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술·스포츠는 16%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9)

[그림 4-2] 4대 혁신활동 유무 : 업종별

- 콘텐츠 산업의 혁신(기술개발과 비기술개발 모두 포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부문은 마케팅 지원과 금융지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문화체육관광부, 2010)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9)

[그림 4-3] 4대 혁신 활동률 : 업종별

- 문화산업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이나, 성공하는 경우 타 산업에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도 간접적으로 기여
- 문화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창구효과(OSMU)에 의해 이전 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사회적 수익이 사적 수익보다 큰 공공재적 성격을 지님

* 한류의 효과(현대경제연구원)

- 생산유발 4조 4,796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 4,687억원, 고용유발 20,899명
- 상품, 관광,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외화 수익 18.7억 달러 (GDP 0.18%)
- 한류에 의한 관광객 증가 : 64.7만 명(2003년 ~ 2004년)

○ 콘텐츠산업은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까지 견인

- '96년 이전까지만 해도 콘텐츠 수출이 미미했으나, 드라마·K-Pop 등 한류의 확산에 따라 콘텐츠 산업 수출이 급성장
 - * 콘텐츠 무역수지(단위: 억 불) : △19.1('06) → 3.5('08) → 15.3('10) → 24.7('11p)
- 또한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 '11년 외래관광객 980만 명(전년대비 11% 증가)/ 국가브랜드순위 15위(전년대비 3단계 상승)
- 한류의 파급 효과는 관광·식품 등 직접적 연관 산업 외에도 IT·자동차·의류 등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 산출
 - * 한류의 매출증대 효과는 서비스업종에선 '문화'(86.7%), '관광'(85.7%), '유통'(75.0%), 제조업에서는 '식품'(45.2%), '전자'(43.3%), '화장품'(35.5%), '자동차'(28.1%), '의류'(23.3%) 순(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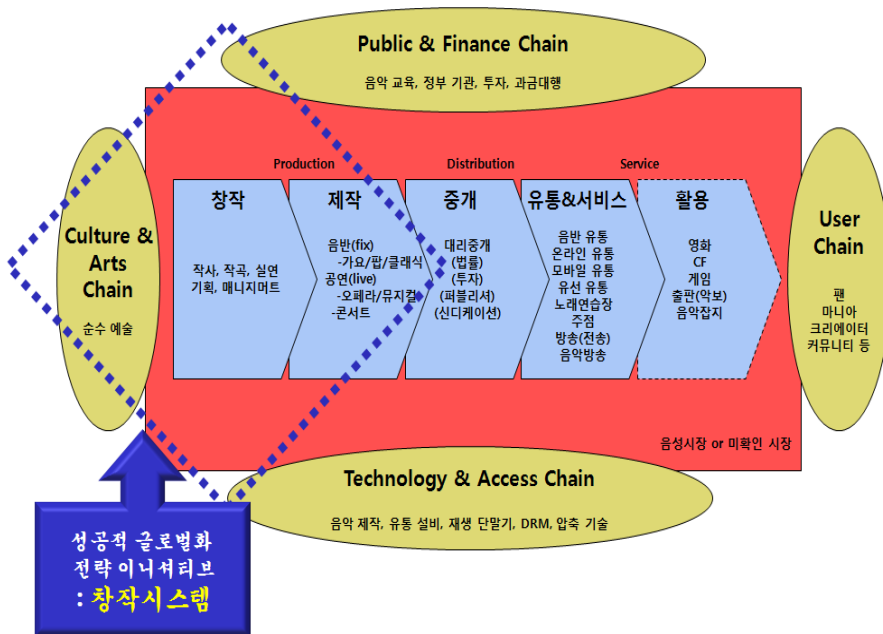
〈표 4-1〉 문화산업 분야 직무별 종사자 현황

	출판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비중(%)
사업기획	12,610	321	1,281	294	1,826	4,298	2160	22,790	8.8
관리	28,852	2,351	1,236	402	2,721	8,207	1998	45,767	17.6
제작	60,764	1,232	2,845	2,917	9,673	22,113	12,868	112,412	43.3
마케팅/홍보	7,486	343	853	289	1,144	1,673	473	12,261	4.7
연구개발	3,119	123	239	149	774	564	382	5,350	2.1
기타(유통)	32,049	5,913	2,090	298	8,964	11,371	503	61,188	23.6
합계	144,880	10,283	8,544	4,349	25,102	48,226	18,384	259,768	100.0

(자료) 2011 콘텐츠산업통계

- 한편 콘텐츠산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 인력은 28,140명으로 전체 인력의 약 10%를 차지(2011 콘텐츠산업통계 기준)
- 그러나 문화산업의 경우 창작개발 단계에서의 창조성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영세성에 의해 창작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바, 창작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 내부에 축적과 재투자를 위해 창작개발인력 인건비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

- 문화서비스 분야의 R&D 성과 향상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표준화 및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 추진이 필요
- 이용자 만족도 등에 영향을 받는 창작물 기반의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서비스를 대상으로 R&D 성과 향상을 위한 표준등급 제정 및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 반영
 -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상품의 성패는 창작 초기단계인 창작기획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제조업의 R&D기능과 유사한 기획개발은 중요함



[그림 4-4] 콘텐츠 글로벌화 최대격전지 : 창작시스템

-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R&D는 연구개발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제품개발에 비해 상당히 높게 반영되며, 문화서비스 R&D의 경우도 차별화된 연구개발 정책이 요구되는 바, 관련 세제의 정비 필요
- 제품위주의 기술개발은 인건비 비중이 약 40%지만, 서비스 분야는 산업특성상 약 70% 정도이므로, 문화서비스 R&D는 인건비 비중 및 수행방

식 등에 있어서 기존 제품위주의 기술개발과 다른 규정이 필요

- 2009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규정(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조)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콘텐츠기업들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콘텐츠 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 됨. 하지만 교과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와 비교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부 조세 혜택으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복잡함으로 이용률이 낮음
- 교과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991년부터 교과부로부터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문화부의 인정 이후 기재부의 최종 고시가 필요함에 따라 절차상 번거로움이 존재함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증신청(기업→문화부)→검토/현장실사/심의(위탁기관: 콘진원)→심사결과통보(콘진원→문화부)→추천(문화부→기재부)→고시(기재부)
 - 반면 교과부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는 2011년 1월부터 온라인(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으로만 설립 및 인증 신청을 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
-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2009년에 3개사, 2010년 6개사가 인정 고시되었으며 2011년에는 28개사가 문화부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기재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제공되는 조세혜택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불과함. 반면 교과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액공제 혜택 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전담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다양한 조세혜택과 더불어 산업기능 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여 군복무 대체) 등을 제공함
- 더 많은 콘텐츠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한 위의 교과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준하는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절차상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²³⁾

2) 정책효과

-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창작 개발을 위한 인력을 내부인력(근로소득자)으로 하기보다는 외부인력(사업소득자)으로 고용하고 있는 바 문화콘텐츠의 창작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의 고용안정에 상당히 이바지
 -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서 문화산업의 기업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영화, 게임, 방송 등에서 창작이 기술개발로 인정되지 못하는 바, 문화산업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본 건의안은 초기 기획개발에 있어 물적 투자까지 세액공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세수 감면은 크지 않은데 비해 이를 통해 영화, 게임, 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매출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23)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문화서비스, 정보서비스, 교육기관, 위생서비스 등)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도 가능해짐. 이에 따라, 콘텐츠 기업들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아닌 절차상 편의성 및 더 많은 혜택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로의 등록을 더 선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표 4-2〉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안

제목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선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경제는 지식서비스 산업이 리드하는 고도 서비스 경제로 재편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대표적 지식기반 서비스인 문화서비스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문화산업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이나, 성공하는 경우 타 산업에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도 간접적으로 기여 ○ 하드웨어 위주의 R&D는 주로 해당 상품에 직접 파급효과를 나타내지만, 문화서비스 R&D는 해당 제품은 물론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영향을 끼치고 특히 고용 부문에서 파급효과가 높으므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하나의 작품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OSMU의 특성을 가지므로 R&D 기획·수행·활용에 있어 기존 제조업 방식과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문화와 콘텐츠라는 속성을 통해 융복합화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시너지를 제고하는 R&D 비전, 목표 수립 필요 ○ 전체 서비스 업종 중 문화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출판·영상 및 예술·스포츠 분야에서 R&D 활동 비율과 혁신 활동율은 평균 수치보다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활동(내·외부 모두 포함) 비율은 출판 영상이 13.3%로 가장 높으며 과학기술이 7.0%, 도소매 5.5%, 예술 스포츠 6.0% - 한편 콘텐츠산업의 기획 및 연구개발 인력은 28,140명으로 전체 인력의 약 10%를 차지(2011 콘텐츠산업통계 기준) - 그러나 문화산업의 경우 창작·개발 단계에서의 창조성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영세성에 의해 창작·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바, 창작·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업 내부에 축적과 재투자자를 위해 창작·개발인력 인건비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 ○ 2009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규정(문화산업진흥기본법 17조)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콘텐츠기업들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콘텐츠 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교과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와 비교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부 조세 혜택으로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복잡하여 이용률이 낮음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 -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가. 건의 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와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조특법」 제 13조 적용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설)	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의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과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출자지분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콘텐츠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및 관광 활성화 등 외부효과도 크게 창출하므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12.2만 개) 중 약 87%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체로, 가

장 큰 애로요인은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

* 조사대상 전체의 47.6% (출처: '11 콘텐츠 중소기업 경영애로조사)

〈표 4-3〉 2010년 콘텐츠기업 규모(2011 콘텐츠산업통계)

매출액 기준	1억 원 미만	1~10억 원	10~100억	100억 원 이상	합계*
업체수	72,637	28,353	5191	968	107,149
비 중	67.8%	26.5%	4.8%	0.9%	100%

- 제조업 위주의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콘텐츠 창작 및 R&D 투자 부족
 - 한국 모태펀드(문화 분야) 규모 : 3,000억원 출자, 8,300억원 결성(2007~2011년)
 - 프랑스 CNC 규모 : 약 1조 7천억원(\$1,522M)출자, 2005년
 - * 2009년 한국영화 총 제작비 3,187억원, <아바타> 제작비 5,300억원(미국 편당 순제작비 250억원 규모)
-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지 못하는 투자부진의 원인은 콘텐츠산업에 특유한 생산구조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투자리스크로 요약될 수 있음
 -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와 인력투입의 비중이 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낮음
 - 콘텐츠산업의 속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작용하므로 투자 및 금융 제공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함
 - 콘텐츠산업에 특유한 흥행리스크와 완성리스크는 투자 및 정보제공을 위한 기준으로서 가치평가가 어려움
 - 그러나 시장이 미성숙하여 투자 및 금융제공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투자의 개념에 프로젝트 투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만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지원법 등의 투자의 범위에 문화콘텐츠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는 제외되어 있어 조세특례 적용의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함
- 문화콘텐츠업종의 경우 게임산업을 제외하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주식이나 출자지분과 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이 상례임
- 따라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투자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것으로 사료됨

〈해외사례〉 - 프랑스, 소피카(SOFICA)

프랑스의 소피카의 경우 결성된 투자조합의 35%를 독립제작자들에게 할당되도록 강제하는 대신에, 소피카의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

- 개인들은 자신의 과세소득의 25%까지 면세범위에 포함
- 기업들은 총투자금액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공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현재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및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참조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의 업종에는 제조업 등과 문화콘텐츠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음
- 산업의 특성이 High Risk, High Return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다 확대된 세제 감면 등의 유인이 없을 경우 투자유인 효과가 적은 콘텐츠 업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세제 지원이 필요
- 문화콘텐츠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투자회사 등이 제조업 등에 투자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이 필요함

2) 정책효과

- 주로 모태펀드로부터 창투사에 투자하여 창투사가 주도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투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의 비과세가 실현될 경우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투자 유입으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는 현장의 콘텐츠 업계에서는 투자의 활성화로 질 높은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정책적으로 모태펀드, 완성보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다양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 부진은 여전히 난제이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창투사의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세제 개선조치는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투자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주어 영세한 콘텐츠 제작 및 배급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할 것임
 -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영화업계로부터의 세수 규모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임
- 영화산업에서 지난 6년간 제작 편수와 평균제작비는 다음 표와 같음
 -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제작편수는 약 121편이며, 연평균 제작비는 32억 원 정도
 - 이에 따른 연평균 총제작비는 약 3,717억 원 정도임
 - 또한 제작편수는 연평균 약 11.8%의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영화산업 제작편수 및 평균제작비

(단위 : 편,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제작편수	87	110	113	124	138	152
평균제작비	39.9	40.2	37.2	30.1	23.1	21.6

자료 : 2010 콘텐츠산업백서

〈표 4-5〉 영화산업 향후 예상 제작편수 및 제작비용

(단위 : 편,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예상 제작편수	190	212	238	266
예상 제작비용	6,080	6,798	7,601	8,498

○ 세액감면규모

구분	효과	비고
2012년 총제작비 추정액 (A)	6,080억원	(*1)
손익분기점(BEP) 상회비율 (B)	24.6%	(*2)
이익이 발생한 영화의 총제작비 추정액 (C)	1,496억원	(A) X (B)
이익이 발생한 영화의 평균투자수익률 (D)	80%	(*3)
이익이 발생한 영화의 투자수익 추정액 (E)	1,197억원	(C) X (D)
투자조합 등 투자비용 (F)	16.35%	(*4)
프로젝트투자조합에 대한 배당추정금액 (G)	196억원	(E) X (F)
세율 (H)	20%	(*5)
감면효과 (I)	39억원	(G) X (H)

(*1) 2012년 총제작비 추정액은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제작편수는 약 121편이며, 연평균 제작비는 32억 원 정도이고 제작편수가 연평균 11.8%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

(*2) 한국영화 개봉작 65편 중 손익분기점 상회편수 16편의 비율을 적용(출처: 2011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3) 손익분기점 상회편수 16편의 수익률 분포(수익률 100% 상회 편수 9편, 50%~100% 4편, 0%~50% 3편)를 고려하여 손익분기점 상회 영화의 평균수익률을 80%로 가정

(*4) 영화제작비 중 중소기업투자조합 등 프로젝트투자로 조달된 제작비 비율을 16.35%(11년 총제작비 대비 모태펀드 문화계정 중 영화에 투자한 비율)로 가정

(*5) 프로젝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인 20%를 적용

○ 연도별 세금감면효과

초년도	2년 후	3년 후
39.13억원	45.54억원	52.99억원

(*) 2007년~2011년 5년 동안의 제작편수의 평균증가율인 16.38%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 세액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세액감면에 따른 생산유발액

산출식 : 39.13억원 X 2.163(생산유발계수) = 84.64억원

－ 세액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

산출식 : 39.13억원 X 0.890(부가가치유발계수) = 34.83억원

－ 세액감면에 따른 고용유발인원

산출식 : 39.13억원 X 13.4명/10억원(고용유발계수) = 52.43명

〈표 4-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건의안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허용 범위 확대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 수출 및 관광활성화 등 외부효과도 크게 창출하므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12,2만 개) 중 약 87%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체로, 가장 큰 애로요인은 담보부족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 ○ 제조업 위주의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콘텐츠 창작 및 R&D 투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모태펀드(문화 분야) 규모 : 3,000억원 출자, 8,300억원 결성(2007~2011년) - 프랑스 CNC 규모 : 약 1조 7천억원(\$1,522M)출자, 2005년 * 2009년 한국영화 총 제작비 3,187억원, 〈아바타〉 제작비 5,300억원(미국 편당 순제작비 250억원 규모) ○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지 못하는 투자부진의 원인은 콘텐츠산업에 특유한 생산구조의 특성과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투자리스크로 요약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지원법 등의 투자의 범위에 문화콘텐츠관련 프로젝트 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는 제외되어 있어 조세특례 적용의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업종의 경우 게임산업을 제외하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같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이 상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현재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를 명시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주로 모태펀드로부터 창투사에 투자하여 창투사가 주도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다양한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투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의 비과세가 실현될 경우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투자 유입으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는 현장의 콘텐츠 업계에서는 투자의 활성화로 질 높은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임 		
연도별 세수감면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39.13억원	45.54억원	52.99억원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가. 건의 내용

- 개인투자자가 프로젝트투자를 통하여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
- － 「조특법」 제 14조 적용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p>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p>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p> <p>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p> <p>(신설)</p>	<p>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p>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u>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u>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p> <p>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 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p> <p>⑥ 제4항 1호에 따른 <u>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2호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u></p>

나. 조세감면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1) 조세감면의 필요성

- 개인출자자가 프로젝트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동 수익 배분금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출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87조의5), 투융자집합투자기구(91조의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91조의6)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
 - 주식 등에 대한 제조업 등의 투자와의 업종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 영화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서 종결하는 방안을 건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하는 배당소득은 본 항의 규정이 없다면 본래의 소득의 지급자가 당해 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할 때 그 조합원의 구성 및 지분율에 따라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해야 함. 그러나 본 항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투자조합에 상기의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됨
 - 중소기업창업투자지원법 등의 투자의 범위에 문화콘텐츠관련 프로젝트 투자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는 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열거하여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특례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함

2) 정책효과

- 문화콘텐츠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투자조합의 개인 출자자가 제조업 등에 투자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콘텐츠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특례 규정 및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제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4%와 동일한 세율 적용이 필요
 - 개인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로 개인투자자들이 콘텐츠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자극하여 전략적 투자자(SI)보다 금융 투자자(FI)의 유입이 늘어날 것임
 -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투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콘텐츠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세액감면규모

구분	효과	비고
2012년 총제작비 추정액 (A)	6,080억원	(*1)
손익분기점(BEP) 상회비율 (B)	24.6%	(*2)
이익이 발생한 영화의 총제작비 추정액 (C)	1,496억원	(A) X (B)
이익이 발생한 영화의 평균투자수익률 (D)	80%	(*3)
이익이 발생한 영화의 투자수익 추정액 (E)	1,197억원	(C) X (D)
조합 등 프로젝트투자비율 (F)	16.35%	(*4)
개인출자자의 투자비율 (G)	5%	(*5)
개인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액 추정액 (H)	9.78억원	(E) X (F) X (G)
세율 (I)	25%	(*6)
감면효과 (J)	2.45억원	(H) X (I)

(*1) 2012년 총제작비 추정액은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제작편수는 약 121편이며, 연평균 제작비는 32억 원 정도이고 제작편수가 연평균 11.8%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

(*2) 한국영화 개봉작 66편 중 손익분기점 상회편수 16편의 비율을 적용(출처: 2011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3) 손익분기점 상회편수 16편의 수익률 분포(수익률 100% 상회 편수 9편, 50%~100% 4편, 0%~50% 3편)를 고려하여 손익분기점 상회 영화의 평균수익률을 80%로 가정

(*4) 영화제작비 중 중소기업투자조합 등 프로젝트투자로 조달된 제작비 비율을 16.35%(11년 총제작비 대비 모태펀드 문화계정 중 영화에 투자한 비율)로 가정

(*5) 영화제작비 중 개인출자자의 투자비율을 5%로 가정

(*6) 개인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 25%를 적용

○ 연도별 세금감면효과

초년도	2년후	3년후
2.45억원	2.85억원	3.31억원

(*) 2007년~2011년 5년 동안의 제작편수의 평균증가율인 16.38%의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 세액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세액감면에 따른 생산유발액

산출식 : 2.45억원 X 2.163(생산유발계수) = 5.30억원

- 세액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

산출식 : 2.45억원 X 0.890(부가가치유발계수) = 2.18억원

- 세액감면에 따른 고용유발인원

산출식 : 2.45억원 X 13.4명/10억원(고용유발계수) = 3.28명

〈표 4-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건의안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적용범위 확대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p>○ 개인출자자가 프로젝트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분받을 경우 동 수익배분금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음</p> <p>－ 그러나 개인출자자가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음</p> <p>－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87조의5), 투융자집합투자기구(91조의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91조의6)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음</p> <p>－ 주식 등에 대한 제조업 등의 투자와의 업종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 영화제작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서 종결하는 방안을 건의</p> <p>－ 중소기업창업투자지원법 등의 투자의 범위에 문화콘텐츠관련 프로젝트투자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는 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열거하여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특례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업종간 불평등이 발생함</p> <p>○ 개인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로 개인투자자들이 콘텐츠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유인을 자극하여 전략적 투자자(S)보다는 금융 투자자(F)의 유입이 늘어날 것임</p> <p>－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투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콘텐츠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p>		
연도별 세수감면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2.45억원	2.85억원	3.31억원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p>○</p> <p>－</p> <p>－</p>		

4.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가. 건의 내용

- 공동제작영화 또는 외국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04조의 2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04조의26 (공동제작영화 등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내국인이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제작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의한 공동제작 영화를 말한다) 또는 외국영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의한 한국영화이 외의 영화를 말한다)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p>

나. 조세감면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1) 조세감면의 필요성

- 최근 수년 동안 영화업계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투자 주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부가시장 붕괴, 내수시장 한계로 영화 제작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극장매출이 약 1조 4,561억 원(2012)정도인데 비해, 부가시장은 온라인 시장을 합하더라도 383억 원에 불과(2011)하여 극장에서의 판매가 제작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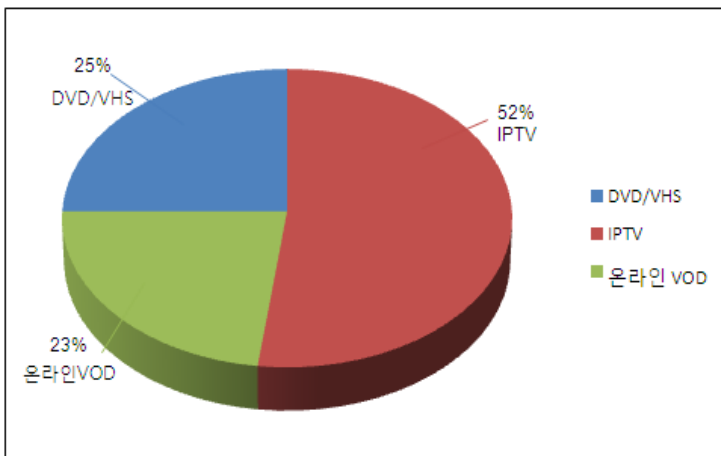
- 그 중 IPTV의 매출이 약 52%로 DVD를 추월하고 있음
- 영화업계는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외국 영화 촬영과 후반 작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표 4-8〉 부가시장 전체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영화 매출액	외국영화 매출액	총 매출액
IPTV	12,335	7,859	20,194
온라인 VOD	6,043	2,638	8,681
DVD/VHS	3,458	5,954	9,412
합계	21,836	16,451	38,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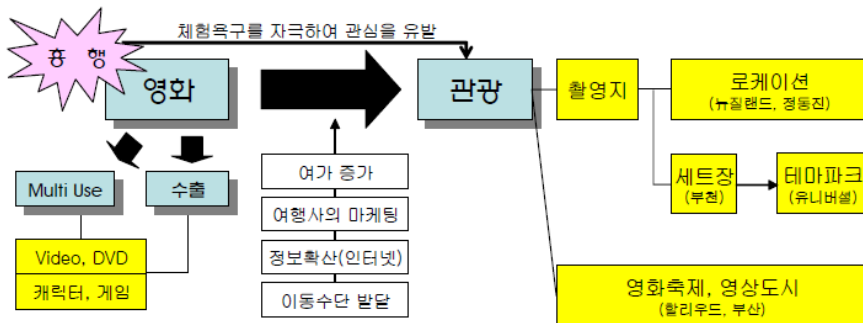
* IPTV 2개 업체 응답, 온라인 VOD 2개 업체 응답, DVD/VHS 3개 업체 응답



[그림 4-5] 부가시장 전체 매출액 점유율

- 영화와 관광은 다음 그림과 같이 로케이션, 촬영 등을 통해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음
- 영화촬영이나 로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체험욕구를 자극하는 기제가 되며 이는 할리우드나 부산과 같이 영화 명소가 관광지로 발돋움한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영화를 촬영하러 입국하는 외국영화업체의 수는 지난 10년간 7개에 불과하여 거의 미미한 수준임



(자료) 고정민(2004),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

[그림 4-6] 영화와 관광의 연계효과

〈표 4-9〉 10년간 외국 영상물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구분	한국영화의 해외 로케이션	외국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2000	2	—
2001	3	—
2002	3	2
2003	5	—
2004	6	—
2005	9	—
2006	3	2
2007	10	1
2008	7	1
2009	10	—
2010	14	1
계	72	7

〈표 4-10〉 최근 외국 영상물 한국 로케이션 유치 현황

(단위: USD)

권역	지역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
		집행 금액(USD)	비중	집행 금액(USD)	비중	
아시아	일본	5,930,244	82.1%	919,038	17.8%	-84.5%
	중국	1,053,501	14.6%	2,312,865	44.9%	119.5%
	말레이시아	185,472	2.6%	54,998	1.1%	-70.3%
	필리핀	50,101	0.7%	92,979	1.8%	85.6%
	인도네시아	-	-	454,473	8.8%	100.0%
	싱가폴	-	-	110,775	2.2%	100.0%
	소계	7,219,318	100%	3,945,128	76.6%	-45.3%
북미	미국	-	-	1,065,668	20.7%	100.0%
유럽	프랑스	-	-	23,473	0.5%	100.0%
	벨기에	-	-	115,015	2.2%	100.0%
합계		7,219,318	100.0%	5,149,284	100.0%	-28.7%

- 지난 10년간 촬영 로케이션의 역조현상, 즉 우리 영화가 해외에서 촬영하는 건수에 비해 해외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촬영하는 사례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1년 이후로는 지역영상위원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힘입어 해외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촬영하는 사례와 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작품의 국내 로케이션 시 집행 비용은 2011년 기준 7,219,318달러로 집계됐는데, 총액 대비 37.9%로 큰 비중을 차지

- 지역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관련 예산 대비 실제 촬영 지출액의 비율은 작게는 1.72배에서 32.3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투입 예산대비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영상위원회에서는 최근 들어 로케이션 촬영 유치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촬영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실제 촬영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사전 프로덕션 및 후반작업까지 지원하는 실정임
- 따라서 로케이션 유치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당장은 세수가 일부 감소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촬영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면이 알려질 경우 외국 영화업체의 촬영유치를 통해 높은 수익과 부대수입을 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

〈표 4-11〉 각 지역별 촬영 영상콘텐츠 유형별 평균 회차 및 회당 평균지출비용

	영화		드라마		기타방송물	다큐멘터리	기타 (CF, M/V)
	평균 회차	회당 평균 지출비용	평균 회차	회당 평균 지출비용	작품 평균 지출비용	작품 평균 지출비용	작품 평균 지출비용
경기	미제출(인센티브 적용 영화·드라마의 직접지출비용 데이터만 제출하여 이를 산출)						
경남*	12.67	7,739,000	2.67	7,406,00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대전	7.56	7,754,174	3.00	5,915,333	미제출	미제출	1,421,583
부산	22.69	8,599,088	3.63	8,229,828	4,989,500	3,026,000	7,554,824
서울*	6.13	2,600,800	2.88	2,502,400	2,167,500	726,000	1,820,571
인천*	6.21	3,251,000	1.00	3,128,000	-	7,260,000	1,327,500
전주	22.59	14,353,081	8.85	6,953,757	3,207,500	-	8,260,000
제주	6.44	5,955,583	29.63	13,322,257	8,675,000	37,916,667	9,633,333
청풍*	3.50	6,978,000	5.92	5,323,000	641,500	1,634,000	-

(자료) 김도학 외(2011), 지역영상위원회 경제효과 평가모델 연구

주) 1. * 표시 지역 : 회차는 제출된 자료이고, 평균 지출비용은 인근지역 영상위원회의 평균지출비용 x 0.9(or 0.8).

2. 서울·인천은 실제 직접비용이 제출된 인센티브 제공 영상물을 제외한 회차와 적용 평균지출비용임. 인천에서 조사된 영화나 드라마의 직접지출비용과 회차를 중심으로 회차만 조사된 영화나 드라마에 적용(영화의 경우 조사된 두 작품간 회당 평균비용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2001년~2004년 평균 로케이션비용 등을 함께 고려. 서울은 인천의 영화나 드라마 평균의 0.8적용(숙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점 고려)

〈표 4-12〉 주요 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관련 예산 및 촬영 영상물의 직접 지출효과 내역

(단위: 백만원)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주	제주	청풍
예산합계		365	226	600	250	707	307	310	390	100
인센티브 관련		305	110	500	250	500	284	250	350	80
기타 예산		60	116	100		207	23	60	40	20
영화	자료	7,911		938	3,121	4,863	165	5,512	613	
	추정		588			765	283			98
	소계	7,911	588	938	3,121	5,627	448	5,512	613	98
드라마	자료	3,174		142	239	216	56	800	3,157	
	추정		118			58	6			410
	소계	3,174	118	142	239	274	62	800	3,157	410
기타 방송물	자료				20			13	35	
	추정					4				0.6
	소계				20	4		13	35	0.6
다큐멘터리	자료				9	150			114	
	추정					2	7			1.6
	소계				9	153	7		114	1.6
기타	자료			34	128			17	58	
	추정					25	11			
	소계			34	128	25	11	17	58	
합계	자료	11,085		1,115	3,518	5,229	220	6,341	3,977	
	추정		706			854	307			510
	소계	11,085	706	1,115	3,518	6,084	527	6,341	3,977	510

(자료) 김도학 외(2011), 지역영상위원회 경제효과 평가모델 연구

〈표 4-13〉 로케이션 관련 예산 대비 각 지역 촬영영상물 직접지출효과 규모

(단위: 백만원)

	경기	경남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제주	충북
로케이션 관련 예산	365	226	600	250	707.3	306.9	310	390	100
촬영 영상물 지출액	11,805	706.7	1,114.7	3,517.6	6,083.6	527.3	6,340.6	3,977.1	509.8
예산대비 촬영 영상물 지출액	32.3배	3.13배	1.86배	14.1배	8.6배	1.72배	20.5배	10.2배	5.1배

(자료) 김도학 외(2011), 지역영상위원회 경제효과 평가모델 연구

2) 정책효과

- 로케이션 촬영유치는 영화 흥행 시 지역 홍보에 따른 관광서비스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아가 한국영화의 국외 로케이션 촬영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외화 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세액감면규모

구분	효과	비고
로케이션 유치 금액 (USD) (A)	USD 8,843,665	(*1)
환율 (B)	1,130	(*2)
로케이션 유치 금액 (KRW) (C)	99.93억원	(A) X (B)
세액공제율	10%	
감면효과 (E)	9.99억	(C) X (D)

(*1) 2011년 유치금액에 공동제작영화 연평균증가율(2006년~2010년)인 22.5%를 적용하여 산출

(*2) KRW/USD의 환율은 1,130원으로 추정

○ 연도별 세액감면효과

초년도	2년후	3년후
9.99억원	12.24억원	14.99억원

(*) 2006년~2010년 5년 동안 공동제작편수 평균증가율인 22.5%로 증가한다고 가정

○ 세액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세액감면에 따른 생산유발액

산출식 : 9.99억원 X 2.163(생산유발계수) = 21.61억원

- 세액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

산출식 : 9.99억원 X 0.890(부가가치유발계수) = 8.89억원

- 세액감면에 따른 고용유발인원

산출식 : 9.99억원 X 13.4명/10억원(고용유발계수) = 13.39명

〈표 4-14〉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안

제목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26 신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년 동안 영화업계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투자 주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부가시장 붕괴, 내수시장 한계로 영화 제작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극장매출이 약 1조 4,561억 원(2012)정도인데 비해, 부가시장은 온라인시장을 합하더라도 383억 원에 불과(2011)하여 극장에서의 판매가 제작영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 ○ 영화와 관광은 다음 그림과 같이 로케이션, 촬영 등을 통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음 – 영화촬영이나 로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 관객들로 하여금 체험욕구를 자극하는 기제가 되며 이는 할리우드나 부산과 같이 영화 명소가 관광지로 발돋움한 사례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영화를 촬영하러 입국하는 외국영화업체의 수는 지난 10년간 7개에 불과하여 거의 미미한 수준임 – 지난 10년간 촬영 로케이션의 역조현상, 즉 우리 영화가 해외에서 촬영하는 건수에 비해 해외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촬영하는 사례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1년 이후로는 지역영상위원회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 힘입어 해외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촬영하는 사례와 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작품의 국내 로케이션 시 집행 비용은 2011년 기준 7,219,318달러로 집계됐는데, 총액 대비 37.9%로 큰 비중을 차지 ○ 지역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관련 예산 대비 실제 촬영 지출액의 비율은 작게는 1.72배에서 32.3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투입 예산대비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로케이션 유치에 따른 세액공제를 통해 당장은 세수가 일부 감소하겠으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촬영에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는 면이 알려질 경우 외국 영화업체의 촬영유치를 통해 높은 수익과 부대수입을 가능하게 하여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임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9.99억원	12.24억원	14.99억원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 -		

5.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가. 건의 내용

○ 해외 수주액의 50%를 제작준비금으로 손금인정

– 「조특법」 제 104조의 2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4조의26 (해외CG 프로젝트 수주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① 내국인이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외로부터 수주하는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단계의 제작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조세감면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1) 조세감면의 필요성

○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은 영화, 게임,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며, 타 산업 파급효과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 산업규모는 국내 약 1,950억원(2011년 말 기준), 영화분야 세계 CG시장 166억불

* 영화 300억/ 애니메이션 336억/ 게임 238억/ 방송 204억 등

* 영화제작비의 30%~50%, 게임제작비의 50%이상, 3D애니메이션의 100%가 CG 제작비용

– 글로벌 CG산업은 매년 약 30% 이상 지속증가 예측

* 영화 ‘아바타’는 5,300억원 제작비 중 약 3,900억원을 CG 제작비로 지출, 2010년도 헐리웃 영화 TOP 10중 CG가 제작비의 50%이상 영화가 9개

* 향후 3D콘텐츠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따라 CG 수요도 급격히 증가 예상

* 2010년 중국은 미국, 인도에 이어 500여편의 영화제작 편수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매출수입 86% 상승

- 국내업체의 CG 제작능력은 헐리웃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영세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음
- * 2010년에는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 CG프로젝트는 265억원이나, 미국시장의 1% 미만에 불과

○ CG산업은 국내 시장규모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미국, 중국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나 경쟁국인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과 해외 수주에 있어 불리한 상황

- 해외에서는 CG 프로젝트의 자국유치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폭적 자금, 세제지원 시행중
- * 캐나다는 세제지원을 통해 인건비의 약30~60%까지 환급, 뉴질랜드는 제작비의 15%, 영국은 20~25% 환급
- *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에 제작비 15% 환급으로 웨타스튜디오가 Top5로 성장하였으며 2만개 신규고용 창출, 관광객 연 5.6% 증가
- 우리나라는 해외 CG프로젝트 수주시 조세지원 제도가 없어 해외경쟁국의 세제지원 등과 비교할 때 지원 과소
- * 지원예산의 규모가 적어 해외수주 프로젝트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해외 대규모 CG프로젝트 수주는 불가능한 실정
- * 헐리웃에서는 연간 1조원 이상의 CG프로젝트를 해외에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최근 뉴질랜드는 TV시리즈 ‘스파르나쿠스’ CG 500억 원을 수주하면서 150억 원을 헐리웃에 인센티브로 제공

2) 정책효과

- 해외 CG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 증가, CG산업 육성으로 영상물 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해외에서 수주하는 CG프로젝트는 수주금은 CG완성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투자(수주한 금액)를 받아 국내기업이 CG를 제작하

기 위한 준비금으로 이에 대한 손금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컴퓨터그래픽 제작 사업에 대하여 해외 수주금액 등에 대한 손비(경비) 인정으로 법인세 등의 직접 국세 감면혜택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컴퓨터그래픽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수주 CG프로젝트에 대해 준비금으로서 소득금액의 50%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중국에서의 수주 대폭 증가로 도입 3년 후부터는 법인세가 오히려 증가되며, 고용증가에 따른 소득세 등 증가까지 고려할 경우 세수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임

○ 해외 수주현황 및 세액

- 현재 해외 수주 CG프로젝트는 연평균 170억원
- 해외 수주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익율) : 10%로 가정
- 해외수주 프로젝트 세수규모 : 3.74억원(법인세+주민세)
- * 법인세 170억원 \times 0.1(이익율) \times 0.22 = 3.74억원(주민세포함)

※ 총세율: 22% (2012년 이후 적용되는 주민세 포함 법인세율로 과표 200억 미만 이하 구간임)

○ 세수 변동 예상

- 준비금 인정으로 해외 수주액 연 40% 증가 전망

구분	도입첫해	2년후	3년후
손금 미인정	3.7억	3.7억	3.7억
준비금 50%	2.6억	3.7억	5.1억
세수변동액	감 1.1억	-	증 1.4억

* 도입 첫해 세액: 2.6억 원 $[170\text{억원}(\text{수주액}) \times 0.1(\text{이익율}) \times 1.4(\text{수주증가율}) \times 0.5(\text{손금인정}) \times 0.22(\text{세율})]$

* 2년 후 : 3.7억 원 $(170\text{억원} \times 0.1 \times 1.4 \times 1.4 \times 0.5 \times 0.22)$

* 3년 후 : 5.1억 원 $(170\text{억원} \times 0.1 \times 1.4 \times 1.4 \times 1.4 \times 0.5 \times 0.22)$

- 500억원 규모 해외프로젝트 2건 수주시 : 약 9.2억 원 세수 증가

* 세수액 : 1,170억원 $(170+500+500) \times 0.1 \times 0.5 \times 0.22 = 12.9\text{억 원}$

* 세수 변동액 : 12.9억 원 - 3.7억 원 = 9.2억 원 증가

〈표 4-15〉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건의안

제목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건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26 신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p>○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은 영화, 게임,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며, 타 산업 파급효과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p> <p>－ 산업규모는 국내 약 1,950억원(2011년 말 기준), 영화분야 세계 CG시장 166억불이며, 세계 CG산업은 매년 약 30% 이상 지속증가 예측</p> <p>－ 국내업체의 CG 제작능력은 할리웃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영세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음</p> <p>* 2010년에는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 CG프로젝트는 265억원이나, 미국시장의 1% 미만에 불과</p> <p>○ CG산업은 국내 시장규모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미국, 중국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나 경쟁국인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과 해외 수주에 있어 불리한 상황</p> <p>－ 해외에서는 CG 프로젝트의 자국유치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폭적 자금, 세제지원 시행중</p> <p>－ 우리나라는 해외 CG프로젝트 수주시 조세지원 제도가 없어 해외경쟁국의 세제지원 등과 비교할 때 지원 과소</p> <p>○ 해외 CG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 증가, CG산업 육성으로 영상물 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기대됨</p> <p>－ 해외에서 수주하는 CG프로젝트는 수주금은 CG완성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투자(수주한 금액)를 받아 국내기업이 CG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이에 대한 손금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p> <p>－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컴퓨터그래픽 제작 사업에 대하여 해외 수주금액 등에 대한 손비(경비) 인정으로 법인세 등의 직접 국세 감면혜택을 적용함으로써, 국내 컴퓨터그래픽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p>		
연도별 세수감소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1.1억	-	- 1.4억(세수 증가)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 이외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 -		

6. 소결

-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 유발,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으며 21세기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 그러나 영세기업 중심, 수익 불안정성에 따른 투자의 난항, 고정자산 형성의 어려움, 타 산업에 미치는 외부효과에 대한 경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점 등 타산업과 차별화된 특성이 조세 당국에 정확히 소명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음
 - 문화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측면이 분명히 강하지만 문화예술이나 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정책 지원이 즉각 효과를 보기 어렵고, 재정지원의 성과도 파악하기 쉽지 않음
 - 그러므로 세액감면 등 조세정책에 의해 당장 세수가 축소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세수감면이 파생시키는 부가효과가 크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보고서에서 일몰기한 연장 건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규제안에 대해서는 타 산업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들로 한정하여 접근
 - 2012년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의 신규제안과,
 - 2012년 문화부에서 제안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안,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제안,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에 대한 손금인정 제안,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제안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함

〈표 4-16〉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방안 제안 개요

번호	내용	대상업종	관련 법령	비고
1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 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산업 일반	조특법 제10조	신규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조특법 제13조	문화부의 기존 건의안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조특법 제14조	
4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조특법 제104조 26	
5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조특법 제104조 26	

제5장 ●●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방안



제1절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방안 검토

1. 검토 개요

- 세법개정안의 추진방향
 - 세법개정의 정책기조는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성장동력 확충,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원임
- 2012년 8월 8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가운데, 문화예술 조세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등(조특법 제6조)이 있음
 - 감면 기간이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
 - 적용기한이 ‘12.12.31.에서 ’15.12.31.로 3년 연장됨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5조)’
 - 적용기한이 ‘12.12.31.에서 ’15.12.31.로 3년 연장됨
-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제20항)
 - 적용기간이 ‘12.12.31.에서 ’15.12.31.로 3년 연장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기관 추가(조특법 제74조)’
 - 문화예술 관련 적용대상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전문예술법인 등으로 기존과 같음
 - 적용기한이 ‘12.12.31.에서 ’15.12.31.로 연장됨

2. 조세감면 추진 방향

① 문화예술재의 가치재적 성격

○ 가치재

- 가치재(merit good)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
- 또한, 민간부문에서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른 생산량이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정부가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의미함(대표적인 가치재로는 교육, 의료, 공공 주택 건설, 공공 체육시설 운영 등이 있음)

○ 공공재와 가치재의 차이점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말하지만, 가치재는 재소화비에 경합성이 있고 배제 또한 가능함

○ 문화예술재의 가치재적 성격

- 생산과 소비의 외부편익이 발생
-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재는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정부지원의 당위성이 제기될 수 있음
-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 개인의 소비행위가 비배타적인 특성과 비경합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② 문화예술재의 공급과 정부 역할

○ 정부개입의 필요성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민간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가치재의 존재는 정부 필요성의 근거이기도 함)
- 예술의 사이드 효과(편익)가 존재, 예술(순수 예술에서 대중 예술을 포함하는)자체의 발전뿐 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고, 경

- 제발전의 윤회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을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
- 반대의 논리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예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임(빈곤, 질병, 범죄, 무지 등)
- 하지만,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즉, 문화예술의 도구화 및 공적통제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세제지원의 필요성

- 부족한 문화예술재의 공급을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혼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문화진흥기금 폐지 등으로 문화예술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음
- 문화예술재의 사적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함

○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세제 지원임

- 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고갈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실천 가능한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2) 조세 지원의 기준

①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제 개선의 논의가 전 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2012년 상반기 중 45만 명 증가)
- 특히,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공급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따라서 관련 일자리를 확대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함

② 타 산업(제조업)과의 차별 완화(보편성)

- 서비스업은 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함
 - 문화예술과 관련된 조세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창업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지원책의 개별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임

③ 형평성

- 타 영역의 조세지원과 형평성이 맞아야 하며, 문화예술 분야의 공급, 수요, 매개 영역 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함
 - 현재 문화예술 조세 지원은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④ 타당성

- 조세 지원으로 인한 조세혜택이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수혜를 입어야 하며, 국가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함
 - 단, 문화예술 영역을 계량화된 경제적인 비용 대 편익 만 고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3) 주요 쟁점사항

① 일몰법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제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제의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그러나 일몰법은 정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사안의 정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률 연장에 필요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로 함

②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논의

- 창업지원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세액 등의 세액감면에 대한 요구
 - 문화예술 중 특히 공연예술은 인건비에 투입되는 비율이 큰 대표적인 인력중심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더 많은지에 대한 다양한 근거가 필요함

③ 문화예술 영역의 특수성과 관련된 논의

- 문화예술 관련 조직 형태에는 각기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인해 재정적 지원의 복잡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지원의 절차가 복잡화, 정책 효과에 대한 왜곡이 발생함(효과가 분산됨)
 - 참고로, 문화예술 단체는 법인과 임의단체로 구분되며, 법인의 경우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음
 - 법인격을 가진 기관은 국공립의 경우, 국공립기관, 책임운영기관, 위탁운영기관 등
 - 민간의 경우, 사단·재단법인, 전문예술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있음
- 문화예술 단체의 재정 건전성 개선책과 국가 재정 정책간의 갈등이 존재함
 - 문화예술 단체의 재정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들은 정책목표의 달성과 더불어 국가 전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탄탄한 근거가 필요함
 -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에 대한 의견이 존재함
 - 문화예술계의 입장에서 기부가 증가하면 문화예술계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자명하지만, 문화관련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자치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세금 10억을 공제했을 경우 기부액이 5억이라면 국가적인 손실일 될 수 있으며 이는 세금-가격탄력성과 관련된 것으로 탄력성이 1과 같거나 커야 세공공제제도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
 - 문화접대비에 대한 의견이 존재함

- 문화접대비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기업의 문화를 통한 접대가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문화접대비의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기업의 투명성 약화)을 발생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사업 양상의 변화에 대한 재인식 필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연장과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문화예술 사업의 정책 대상이 세분화되어 기존의 창작자, 향수자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만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도 증가하는 추세임(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등)
- 특히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증가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문화향수 지원 정책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근로소득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논의가 있음
- 현재 문화비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중산층 이상 이므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공급부문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건으로 건의됨
- 수요부문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이 안건으로 건의 됨

○ 문화예술 부문의 조세감면과 관련된 신규 안건은 발굴하지 못함

- 그러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조세(특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행정적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서비스 위탁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예를 들어 나눔티켓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 현금영수증 발행 등의 행정 고충이 발생하는 상황

제2절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방안

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가. 건의내용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되는 바,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동 규정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개정

현행	개정(안)
<p>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 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p> <p>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p> <p>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p>	<p>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p> <p>“...해당 사업 시설에서...” (삭제)</p>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내용을 보면 공익적 역할을 추구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제약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
 - 그러나 현행법 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공간적 제약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관련 규정 중 조특법 제74조는 구체적인 공익법인을 열거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만 단서 조항이 존재)

관련 법조문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생략)...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마.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바. (...병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가-마. (...)

-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문화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복지의 수요, 공급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인 편익을 고려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음
 - 특히, 사립 도서관, 사립 박물관, 사립 미술관은 공익차원에서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며,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국공립 기

관들과 차이점이 거의 없음

- 각 기관들의 (가치재적)서비스 공급의 양을 늘리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2) 정책효과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초대 이어령 장관에 의해 국민 문화향수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움직이는 박물관, 미술관 사업)이 본격 추진
 - 이후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
 - 2004년부터 문화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고, 문화예술진흥원 사업은 복권기금문화나눔 사업 중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으로 전환됨
- 찾아가는 미술관, 박물관, (작은)도서관의 사업 등은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이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시설별 현황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
-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함
 - 목적사업과 연계한 수익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할 경우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체에 대해 경제적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보완책 필요)

제목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의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되는 바,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동 규정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 74조 개정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내용을 보면 공익적 역할을 추구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은 제약 없이 손금산입이 가능함 - 그러나 현행법 상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공간적 제약이 있음 - 조특법 제74조는 구체적인 공익법인을 열거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문화양극화 완화를 목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복지의 수요, 공급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적인 편익을 고려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 대비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음 - 특히, 사립 도서관, 사립 박물관, 사립 미술관은 공익차원에서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며,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국공립 기관들과 차이점이 거의 없음 - 각 기관들의 (가치재적)서비스 공급의 양을 늘리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없음		

2.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가. 건의내용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해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현행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5(문화예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나. 조세감면 필요성 및 정책효과

1) 조세감면의 필요성

- 타 산업 영역의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제적 성격의 조세 지원이 존재함(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안전 강화 등)
- 이는 공익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경우 3%(중소기업의 경우 7%), 환경보전 시설투자의 경우 10%, 안전시설 설비투자의 경우 3%,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의 경우 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의 경우 7%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관련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②(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③(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④(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문화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음
 - 문화기반시설은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문화예술 창달의 물리적인 기반이 되는 SOC임

2) 정책효과

- 민간영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가능성이 존재함
-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짐
 - 예를 들어, 한류 등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 등장(K-ART박물관, K-POP공연장 등)
 - 체육, 관광산업과 연계(융복합적 관점)
 - 문화복지 사업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 등의 운영(노약자, 장애인 등)
-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수자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적 접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양혜원(2012)의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이 연구의 내용 중에서 문화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문화복지 사업 중 문화시설 건립(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미술관)에 투입된 예산은 133,996,400,000원 임
 - 한국은행이 작성한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작성결과」에 따르면, 건설부분 생산유발계수는 2.10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49, 고용유발계수는 12.1, 취업유발계수는 13.7로 나타남
 - 투입된 전체 예산과 각 유발계수를 간접적 간략기법(indirect short-cut methods)을 활용하여 각각의 값을 도출하면, 문화시설 건

립의 총생산효과는 2,81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004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621명, 취업유발효과는 약 1,836명으로 나타남

- 양혜원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조세감면을 통한 문화기반시설 투자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며, 문화정책의 본연의 과제인 문화예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기반시설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성격별, 용도별 후속연구가 필요함

제목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해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산업 영역의 경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선제적 성격의 조세지원이 존재함(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안전 강화 등) ○ 이는 공익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경우 3%(중소기업의 경우 7%), 환경보전 시설투자의 경우 10%, 안전시설 설비투자의 경우 3%,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의 경우 1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의 경우 7%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음 – 문화기반시설은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문화예술 창달의 물리적인 기반이 되는 SOC임 ○ 민간영역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가능성이 존재함 ○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짐 – 예를 들어, 한류 등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 등장(K-ART박물관, K-POP공연장 등) – 체육, 관광산업과 연계(융복합적 관점) – 문화복지 사업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 등의 운영(노약자, 장애인 등) ○ 문화예술 창작자와 향수자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적 접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없음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가. 건의내용

- 문화접대비 세제특례에 대한 일몰제 폐지 및 문화접대비의 비중 상·하한 한도(10%, 1%)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③개정

현행	개정(안)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일몰기한 삭제 문화접대비 상한규정 삭제
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화접대비 하한규정 삭제

나. 조세감면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우리나라 접대비 현황
 - 2011년 한해 기업의 접대비는 8조3,000억 원 정도의 규모임
 -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

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기업(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함)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

○ 조세감면의 필요성

- 불건전한 접대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예술계의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
- 문화예술재의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의 공급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음(문화예술에 대한 지출 활성화)

○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

- 2007년 문화접대비 세제특례 도입 시, 기업의 접대문화의 개선,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한시적 일몰제 시행
- 현재 일몰제가 2014년까지 연장, 적용한도가 확대됨(3%초과→1%초과)에 따라, 앞으로 문화접대비를 현재보다 '확대(27.0%)'하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71.0%)'하겠다는 기업이 98%로 나타남(중소기업중앙회, 2012)
-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2009년 2.8백만 원, 2010년 4.9백만 원, 2011년 5.3백만 원으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접대비의 장기적인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함

○ 문화접대비 상·하한(10%, 1%) 한도의 폐지

- 문화접대비 상한 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접대비 증액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함
- 전략적 관점에서 문화접대비 상한을 10%에서 30~40%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초과 한도액을 10~20%로 확대할 경우 평균 4.47%, 20~30%로 확대할 경우 7.19%, 30~40%로 확대할 경우 평균 10.59%로 문화접대비를 확대할 것으로 조사됨(중소기업중앙회, 2012)

2) 정책효과

- 유흥 중심의 기업 접대문화를 개선, 문화예술계에 활력 제공 등의 정책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기업의 매출액, 접대비,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 변화
 -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374%, 2011년 1.368%로 큰 차이가 없으나, 2009년 0.928%에 비해 늘어남

〈표 5-1〉 기업의 매출액, 접대비,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항 목	2009년		2010년		2011년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총 매출액	143,607	43,082,237	169,916	46,387,319	214,293	64,287,913
접대비 총 지출액	306	91,784	357	97,802	389	116,756
접대비 中 문화접대비 지출액	2.84	851	4.91	1344	5.32	1,597
매출액 대비 총 문화접대비 비중※	0.002%	0.002%	0.003%	0.003%	0.002%	0.002%
총 접대비 대비 총 문화접대비 비중※	0.928%	0.928%	1.374%	1.374%	1.368%	1.368%

※ 문화접대비 신고액이 아닌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2)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보고서 재인용

- 문화접대비 제도 개선에 따른 문화접대비 확대 의향
 - 문화접대비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27.0%, 현행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71.0%로 나타남

〈표 5-2〉 문화접대비 확대 의향

(단위: %)

구 분	N	문화접대비 확대	현행유지	문화접대비 축소
전 체	300	27.0	71.0	2.0
소재지	수도권	183	24.0	74.3
	지방	117	31.6	65.8
기업 규모	중소기업	232	25.0	72.8
	대기업	68	33.8	64.7
업종	제조업	202	27.7	70.8
	문화예술산업	3	66.7	33.3
	지식기반업	14	14.3	85.7
	서비스업	44	27.3	68.2
	도소매업	2	0.0	100.0
	기타	35	25.7	71.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2)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보고서 재인용

○ 접대비 초과 한도에 따른 문화접대비 변화

- 1% 한도 폐지 시 기업의 3.6%가 확대의사를 보임

〈표 5-3〉 접대비 초과 한도에 따른 문화접대비 변화

(단위: %)

구 분	규모별	응답수	확대비율(평균)
1% 한도 유지 시	전체	300	2.28
	대기업	232	3.32
	중소기업	68	1.98
1% 한도 폐지 시	전체	300	3.60
	대기업	232	4.38
	중소기업	68	3.38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2)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보고서 재인용

○ 접대비 초과 한도액 확대 시 문화접대비 변화

- 초과 한도액 확대 범위가 크면 클수록 문화접대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함

〈표 5-4〉 접대비 초과 한도액 확대 시 문화접대비 변화

(단위: %)

	응답수	확대비율(평균)
10%~20%추가 손비 인정 시	300	4.47
20%~30%추가 손비 인정 시	300	7.19
30%~40%추가 손비 인정 시	300	10.59
100% 추가 손비 인정 시	300	18.4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2)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보고서 재인용

제목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대비 세제특례에 대한 일몰제 폐지 및 문화접대비의 비중 상·하한도(10%, 1%) 폐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③개정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접대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한해 기업의 접대비는 8조3,000억 원 정도의 규모임 ○ 조세감면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건전한 접대문화의 관행을 개선하고, 문화예술계의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음 - 문화예술재의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의 공급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음(문화예술에 대한 지출 활성화) ○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문화접대비 세제특례 도입 시, 기업의 접대문화의 개선,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한시적 일몰제 시행 - 현재 일몰제가 2014년까지 연장, 적용한도가 확대됨(3%초과→1%초과)에 따라, 앞으로 문화접대비를 현재보다 '확대(27.0%)' 하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71.0%)'하겠다는 기업이 98%로 나타남(중소기업중앙회, 2012) -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은 2009년 2.8백만 원, 2010년 4.9백만 원, 2011년 5.3백만 원으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 문화접대비 상·하한(10%, 1%) 한도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대비 상한 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접대비 증액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함 - 전략적 관점에서 문화접대비 상한을 10%에서 30~40%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 초과 한도액을 10~20%로 확대할 경우 평균 4.47%, 20~30%로 확대할 경우 7.19%, 30~40%로 확대할 경우 평균 10.59%로 문화접대비를 확대할 것으로 조사됨(중소기업중앙회, 2012) ○ 유흥 중심의 기업 접대문화를 개선, 문화예술계에 활력 제공 등의 정책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없음		

4.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가. 건의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연고에 지급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문화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대상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신문, 정기간행물, 간행물 및 미술품 구입 금액, 영화 및 공연 관람료, 미술관·도서관·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이용료,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등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⑩ 신설

현행	개정(안)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⑨ (생략)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⑨ (현행과 같음) ⑩ 문화예술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내역 신설

나. 조세감면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1) 조세감면 필요성

- 문화예술 분야 지출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문화적 재투자로서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여가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011년 현재 전체 취업자는 2,424만4천명이고, 이중 임금근로자는 71.8%인 1,739만7천 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2)
- 2010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의 걸림돌은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문화체육관광부, 2010)
 - 즉, 아래의 표와 같이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함

〈표 5-5〉 문화향수의 걸림돌

		시간부족	경제적부담
예술행사 관람의 걸림돌	2010년 조사	41.5 %	29.3 %
	2008년 조사	29.0 %	35.1 %
	2006년 조사	30.0 %	30.3 %
문화예술교육 걸림돌	2010년 조사	44.6 %	13.5 %
	2008년 조사	30.9 %	19.0 %
	2006년 조사	31.6 %	19.7 %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참여 걸림돌	2010년 조사	46.7 %	15.3 %
	2008년 조사	29.2 %	19.5 %
	2006년 조사	33.2 %	19.2 %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걸림돌	2010년 조사	43.0 %	9.4 %
	2008년 조사	30.1 %	13.8 %
	2006년 조사	30.3 %	13.5 %
역사문화유적 방문 걸림돌	2010년 조사	45.5 %	13.8 %
	2008년 조사	28.5 %	20.1 %
	2006년 조사	29.9 %	18.6 %
지역축제 관람 걸림돌	2010년 조사	40.1 %	12.4 %
	2008년 조사	22.5 %	14.0 %
	2006년 조사	27.8 %	12.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2010)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재인용

- 위의 자료의 수치를 타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내용과 비교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 근로소득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제항목은 보험료(소득세법 제52

조①), 의료비(소득세법 제52조②), 교육비(소득세법 제52조③) 등의 항목임

- 이는 노동공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들을 사업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제하는 것임
-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지출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의 특별공제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

○ 단, 문화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보이며, 문화비 관련 지출이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면, 혜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보완책이 필요)

2) 정책효과

-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주로 중산층 이상)
 - 이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문화예술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민의 여가 생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지출비용의 증가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도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한 창의력 개발 등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제목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건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문화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제대상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신문, 정기간행물, 간행물 및 미술품 구입 금액, 영화 및 공연 관람료, 미술관·도서관·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이용료,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⑩ 신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 지출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문화적 재투자로서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여가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011년 현재 전체 취업자는 2,424만4천명이고, 이중 임금근로자는 71.8%인 1,739만7천 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2) ○ 2010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의 걸림돌은 ‘시간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문화체육관광부, 2010) ○ 단, 문화비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을 보이며, 문화비 관련 지출이 상당히 낮은 현실에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면, 혜택의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보완책이 필요) ○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한 부담 완화(주로 중산층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문화예술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 국민의 여가 생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지출비용의 증가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도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한 창의력 개발 등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임 		
연도별 세수효과	도입첫해	2년 후	3년 후
재원조달방안			
조세지원이와 재정, 금융 등 지원 내용	없음		

5. 소결

- 이제까지 최근 5년 간 조세감면 건의 동향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세감면 건의안 4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8건의 조세감면을 건의하였음
 - 건의된 안건들은 문화예술재의 수요와 공급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한 문화예술계의 재정 상황의 개선이 주된 이유임
-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안의 특성은 일몰기한 연장,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의 특수성임
 -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2012.08.08.)에서 문화예술 영역과 관련된 조특법 제5조, 제6조, 제121조제20항, 제74조 등이 개정되었음 (일몰기한 연장 등)
- 기획재정부의 비수용 사유를 검토함
 -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의 조세 차별은 완화될 전망됨
 - 타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임
 - 2중 수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새로운 조세 감면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부처, 문화예술 기관, 협회 등에 협조를 부탁하고 인터뷰 조사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신규 조세감면 안건을 발굴하지는 못함
 - 따라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내용 중에서 적정성,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존의 안건을 검토하여, 4건을 선별함
- 추려진 안건은 4건으로 공급부문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해당 시설 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대한 손금산입(조특법 제74

조 개정”, “문화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신설)”이며, 수요부문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조특법 제136조③개정)”,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소득세법 제52조 신설)”임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문화예술재가 가진 긍정적 외부효과를 생각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질과 양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점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 축적과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필수적임

제6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관광, 문화산업, 문화예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경제상황 및 조세정책과 해당 산업분야의 당면과제를 고려하여 각종 조세에 대한 감면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 특히 관광산업은 초기에 대규모에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수익 회수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관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조세지원이 필요한 분야임
- 향후 국책사업과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성 향상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문화 및 관광산업에 대한 감세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조세정책 기조를 충족한 실현가능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는 전략적 방법을 통해 조세감면 건의안을 도출함
- 문화 및 관광분야 조세감면안 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판단기준은 각 산업분야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최우선적 추진이 요구되고, 기타 산업과의 형평성 확립이 필요하며, 기대효과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도출함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2015. 12. 31까지),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MICE 종업원할 사업소세 한시적 면제,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 확대안이 도출됨
- 문화산업 분야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

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컴퓨터 프로젝트 수주 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안이 도출됨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 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안이 도출됨
- 문화 및 관광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므로, 감세정책 후에도 세수감소 보다는 사업체 매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법인세 및 소비세 등 세수를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됨
- 본 보고서에서 1장, 2장, 3장, 6장, 부록은 이성태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2장 중 문화 분야 조세감면 건의 현황과 4장 및 5장은 각각 정현일 책임연구원 및 박종웅 셋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제2절

정책제언

- 경제 집중성장 시대에 고착된 제조업 중심 정책과 문화 및 관광산업을 소비성 사치산업으로 간주하는 인식으로 인해 문화 및 관광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제조업과의 조세차별도 상당한 수준임
- 그러나 문화 및 관광산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경제파급효과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의 창의적 동력산업인 바, 국가 혹은 지방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육성 및 발전을 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함
- 그러나 조세문제는 명료한 사안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에 따른 정책적 및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국가조세정책 기조에 대한 부합과 재정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아야 함
- 문화 및 관광산업의 조세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안건은 지속적으로 개발 및 보완해야 하므로, 확대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2012), “2012년 세법개정안.”
- 김승래·박상원·이철인(2008),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지영·박상원(20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용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 「한국관광산업 규제개혁 종합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09),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1 콘텐츠산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 안종석·전영준(2011),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전병목·박상원·박명호·조명환(2010),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전병목(2010),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의 역할”, 조세·재정 BRIEF, 한국조세연구원
- 최석준·서영웅(2010), “조세감면이 기업의 R&D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 11, No. 9, pp.3223-3231.
- 한국관광호텔업협회(2012), 「2011 호텔업운영현황」

ABSTRACT

Study on tax rate reduction and tax exemption for cultural and tourism industry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n the policy of tax rate reduction and tax exemption for cultural and tourism industry. In the procedure of examining various tax reduction and exemption plans, priority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ose aspects such as agreement to the national tax policies, economic effect, fairnes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realizability.

In spite of higher production propagation effect and job creation effect than manufacturing industry, cultural and tourism industry has suffered insufficient governmental support in financial and taxation areas because of being recognized as a luxurious consumption-oriented business. Intensive promotion of manufacturing-oriented economic growth policy in 1960~1980 was another reason that helped to create the present discrimination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tourism industry, active investment is necessary in the early stage. If operational cost is reduced and investment is expanded through policies such as tax rate reduction and tax exemption, domestic economy and job creation can be activated. And, the governmental revenue will also increase though income tax,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nd stamp tax.

Tax rate reduction and tax exemption for cultural and tourism industry won't be easily established, considering that the new administration puts expanding sources of revenue ahead of others to promote various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and welfare policies. However, because cultural and tourism industry is being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of the future generation, a reasonable and balanced tax policy is needed to facilitate macroscopic economic growth.

부록 ● ●

문화관광 조세감면안 요약



〈표 A-1〉 관광산업 분야 조세감면 안건

조세감면안	관련법	개정내용	기대효과	비고	색인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관광숙박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 액공제기한 2015.12.31까지 연장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 내수 진작	계속 안건	보고서 76P. 참조
유원시설 관련 수입기자재 도입 시 관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국내 생산 불가능 수입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률의 제조업 수준 상향 조정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 내수 진작	신규 안건	보고서 86P. 참조
MICE 종업원할 사업소세 한시적 면제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 50인 이상 MICE업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한시적 면제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신규 안건	보고서 93P. 참조
유원시설업 관련 취득세 개선	지방세법 277조, 지방세법 104조 개정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광단지 내 관광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형평적 적용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신규 안건	보고서 99P. 참조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관광호텔의 서비스교육, 조리연구실 확충, 객실개보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신규 안건	보고서 103P. 참조

〈표 A-2〉 문화산업 분야 조세감면 안건

조세감면안	관련법	개정내용	기대효과	비고	색인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조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문화산업 창작 및 인력개발을 포함	· 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창출	계속 안건	보고서 112P. 참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지분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및 지분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 중소기업 지원	계속 안건	보고서 123P. 참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출자자의 프로젝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4조	개인투자자가 프로젝트투자를 통하여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	· 중소기업 지원	계속 안건	보고서 130P. 참조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26 신설	공동제작영화 또는 외국영화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유치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지원 · 내수 진작	계속 안건	보고서 135P. 참조
해외 컴퓨터그래픽 프로젝트 수주 시, 제작준비금 손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26 신설	해외수주액의 50%를 제작준비금으로 손금인정	· 중소기업 지원	계속 안건	보고서 143P. 참조

〈표 A-3〉 문화예술 분야 조세감면 안건

조세감면안	관련법	개정내용	기대효과	비고	색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해당시설외 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74조 개정	문화예술사업 증가세를 고려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중소기업 지원	계속 안건	보고서 159P. 참조
문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100(중기는 7/100)을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지원 · 내수 진작 · 일자리 창출	계속 안건	보고서 163P. 참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3항 개정	문화접대비 세제특례에 대한 일몰제 폐지 및 문화접대비의 비중 상하한도 폐지	· 중소기업 지원 · 내수 진작 · 일자리 창출	계속 안건	보고서 167P. 참조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소득세법 제52조 10항 신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신문, 정기간행물, 간행물 및 미술품 구입 금액, 영화 및 공연 관람료, 미술관·도서관·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이용료, 문화예술교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 등 공제	· 중소기업 지원 · 내수 진작 · 일자리 창출	계속 안건	보고서 173P. 참조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정 헌 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 종 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섯별연구원)

연구보조

김 소 영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문화·관광분야 조세감면 방안 연구

발 행 인 박 광 무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2년 12월

발 행 일 2012년 12월

인 쇄 인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393-0 93300